

2019 남북통합지수

2019 남북통합지수

2019

남북통합지수

IPUS

안동환 · 김병연 · 김학재 · 천경호
이종민 · 조용신 · 황창현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공동연구원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종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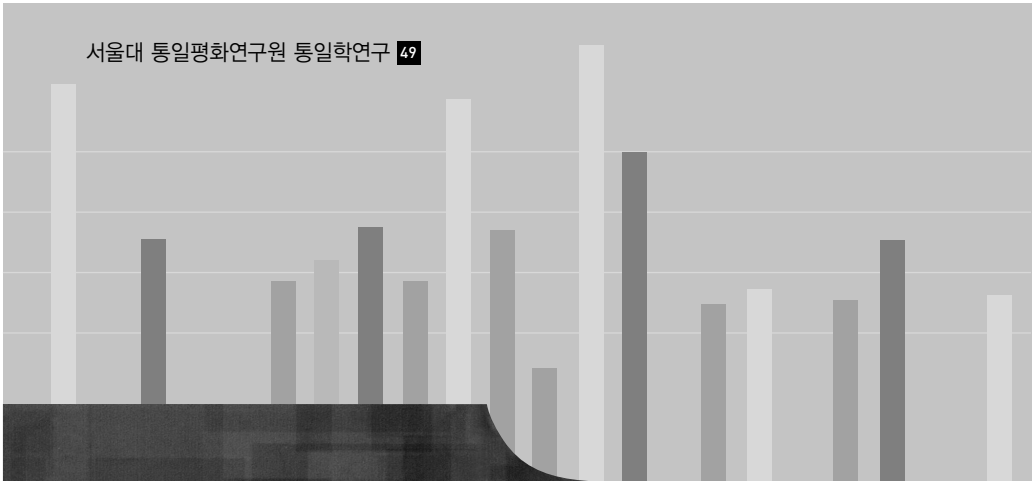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황창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남북통합지수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ONTENTS

1부 |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9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11
2. 영역별 요약	15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8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2

2부 | 2019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9
가. 지수구성	29
나. 제도통합지수	30
다. 관계통합지수	35
라. 종합	49
2. 정치	57
가. 지수구성	57
나. 제도통합지수	58
다. 관계통합지수	65
라. 종합	94
3. 사회문화	97
가. 지수구성	97
나. 제도통합지수	98
다. 관계통합지수	106
라. 종합	124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128
2. 영역별 지수	130
가. 경제	130
나. 정치	141
다. 사회문화	152
3. 종합	165

3장. 남북통합지수 : 2011~2018

168

CONTENTS (표)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30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81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2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82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4	〈표 2-34〉 2018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86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37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91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39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92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41	〈표 2-37〉 2017년/2018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94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3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95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5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97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7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9
〈표 2-10〉 2017년/2018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50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102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51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102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3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103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54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103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55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105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57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106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59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7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61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09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62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12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62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13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4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15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6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7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68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7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9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19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0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21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72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22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72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24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74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6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76	〈표 2-59〉 2018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27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6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8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28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79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0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1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33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4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5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8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39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1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2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3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4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46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7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50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53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53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55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57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58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60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63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66

<표 4-1> 201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2> 2017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3> 2016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4>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5>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6>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7>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8>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1
<표 4-9>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1
<표 4-10>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74

CONTENTS (그림)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11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5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0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1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52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96
<그림 2-4>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7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10~2018년 변화 추이	167
<그림 4-1> 2011~2018년 구조통합지수(제도통합+관계통합) 비교	173
<그림 4-2> 2011~2018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173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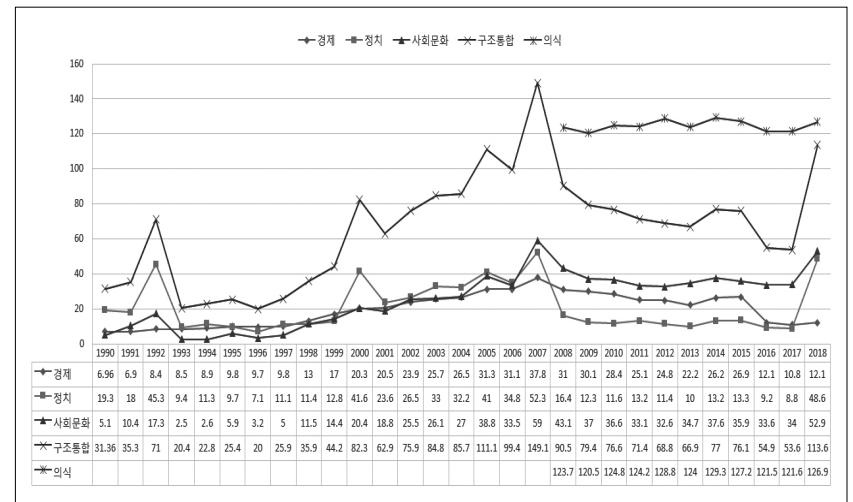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9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및 전망
3. 남북통합지수의 평가, 전망, 제언

1. 2019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 2019년 남북통합지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적 통합에 의한 정치 영역 및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의 대폭 상승이다. 이는 2018년에 이어진 연속적인 남북정상회담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정치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제한적인 방북이 허용되면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남북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남북 간 경제분야 교류 재개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정상간 교류 활성화를 반영한 관계부문 통합지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관계부문지수의 개선으로 크게 상승하여 2007년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남북교류의 진전이 미미한 상황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비교적 활발한 당국자 회담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영역별 통합단계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향상(정치, 사회문화)되거나 유지(경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영역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문화적 교류 재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물적 자원 교류 현황만으로 평가하면 2018년의 남북 경제통합 수준은 사실상 0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0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제도통합 측면의 개선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차원의 회담 재개, 각종 회담 부분에서 다양한 합의문, 다양한 긴장완화, 평화 구축 노력이 평가된 결과이다.
 - 사회문화영역 통합단계는 3단계(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협의기구(매개 제도)가 구성된 상태)로서 당국자회담, 공동입장, 공동보도문 등에 힘입어 전년의 2단계에서 한단계 상승하였다.
- 남북의식통합지수는 사회문화영역에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의식통합지수는 비교적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변화 추이를 보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경제부문에서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증가를 보였으며, 북한주민의 경우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의식통합지수 상승을 가져온 반면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와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정치제도 동질성은 소폭 하락한 반면,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등의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8.3%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항목의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의 부정적 평가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한 종합 남북통합지수는 240.5점으로 전년(176.2점) 대비 약 3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식통합지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통합의 수준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때문이다.
 - 지난 10년간 종합지수는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8년 크게 증가하여 남북의식통합지수를 조사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의식통합지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 추세 속에서 2018년 크게 증가한 구조통합지수의 변화가 종합지수의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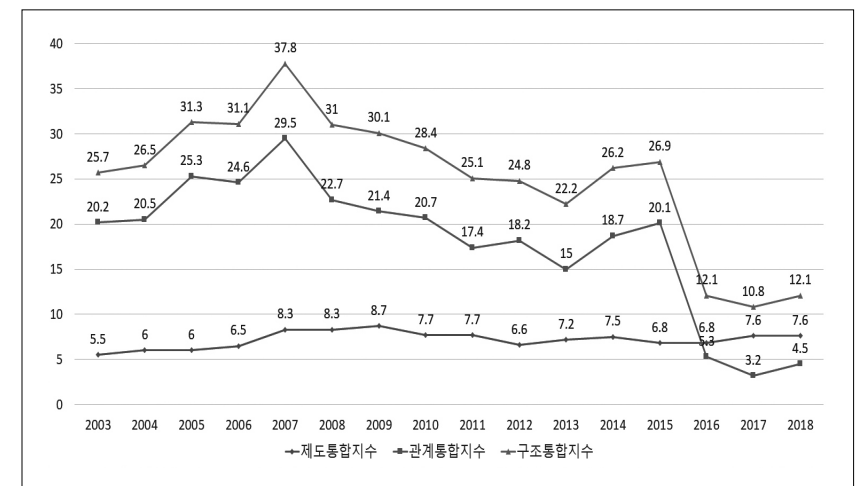
- 종합지수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률은 2018년 24.1%로 2017년 17.6%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관계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합률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 남북한 통합률은 2008년 이후 2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 17% 대로 하락하였으며, 다시 2018년에 24.1%로 크게 증가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에서 16.6%로 가장 낮은 통합률을 보이며, 정치영역에서 27.5%, 사회문화영역에서 31.0%로 유사한 통합률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특히 정치영역의 통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통합지수의 변화 추이와 일관된 결과이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 2018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3점 상승한 12.1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8년에는 남북 교역 비중 증가, 대북 사업 투자 지원 증가, 제도 장치 확립 정도 증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증가가 수치적인 측면에서 지수 상승에 기여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전무한 가운데 경제 교류 재개에 대한 가시적 전망이 없어 상승의 폭은 크지 않았다.
- 통합단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체적으로 2018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락요인〉

○ 없음

□ 〈상승요인〉

○ 정치 및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제한적인 방북이 허용되어 무역자유화 점수가 0.5점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비상업적 물자 반출/입이 동반되어 교역 점수 또한 0.2점 증가하였다. 경험 관련 기업에 대해 투자 성격의 지원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 점수가 0.1점 상승하였으며, 인프라 및 산림 협력 관련 남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어 제도적 장치 점수가 0.5점 증가하였다.

□ 2019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 2019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2018년 대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열린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합의 없이 종료된 가운데 비핵화와 그 보상을 둘러싼 남북,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남북 간 경제 교류 역시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집중하며 남한과의 대화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점이 반영된다면 2019년의 구조 통합지수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법제화 평가 점수와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2019년의 구조통합 지수는 2018년과 같이 1단계에 머물게 될 공산이 크며, 0단계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 → 2015년 42.6점 → 2016년 39.3점 → 2017년 38.3점 → 2018년 41.2점으로 3년만에 다시 40점대를 회복하였다.

□ 2018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 점수는 2017년 16.6점 → 2018년 18.9점으로 2.3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7년 21.7점 → 2018년 22.4점으로 전년대비 0.7점 상승하였다. 특히, '시장 경제에 대한 선호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어 대외 개방 및 경제 개혁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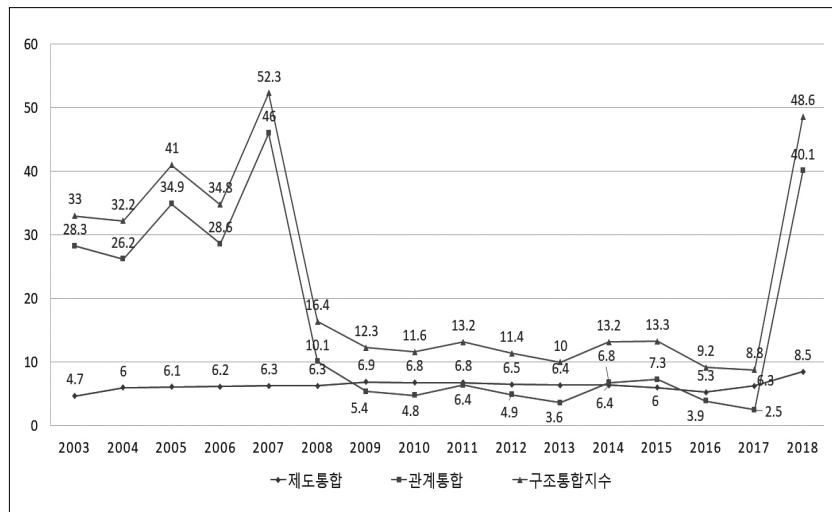
○ 구조통합지수는 작년에 비해 2.9점 상승하여 3년 연속 하락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구조 통합지수가 이렇듯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와 평창올림픽 등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재개되면서 경제적 교류 또한 수반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즉, 2018년에는 상황은 정치적인 긴장 완화가 경제 영역의 구조 통합 수준 역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제영역의 독자성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치

- 2018년 정치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87.9점으로 전년도 45.1점보다 크게 상승하여 추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은 작년보다 39.8점이 상승한 48.6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은 3.0점이 상승한 39.3점을 기록하였다.
- 2018년 남북통합지수의 큰 폭의 상승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른 정상 간의 교류의 활성화로 구조통합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조통합지수는 201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3년 약 9.9점으로 0단계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3.2점이 상승하여 1단계를 가까스로 회복하였고 2015년에는 0.1점 상승한 13.3점이나 통합단계는 전년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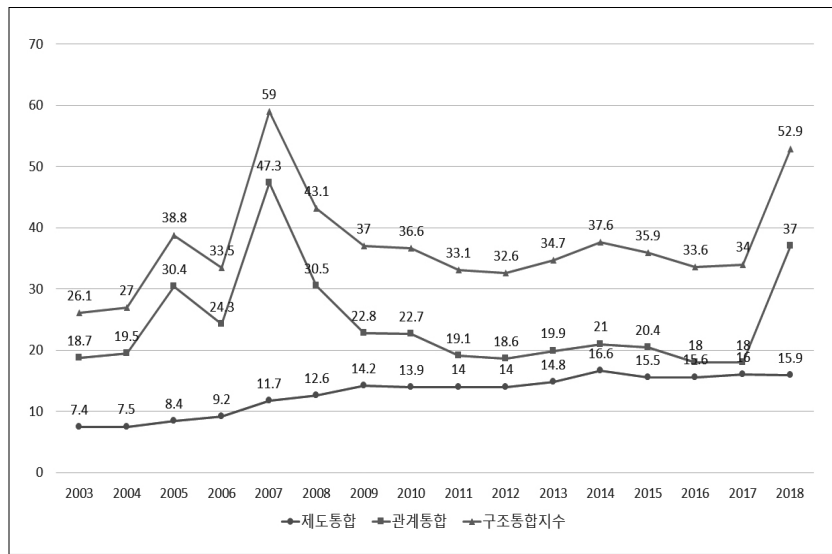
한 1단계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4.1점 하락한 9.2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7년에는 더 하락하여 8.8점까지 떨어졌으나 2018년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여 48.6점을 기록했다.

- 구조통합지수의 한 축인 제도통합 부분은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부문에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여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자원을 경제 발전으로 이동하는 사회주의 체제이행의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보아 1.5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하였다.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은 2017년 대비 0.2점 상승하였다.
- 관계통합의 경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에 따른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 등 남북 간 정치적 교류의 활성화로 2017년에 비하여 무려 37.6점 상승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정치분야 통합단계는 ‘대화 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되는 단계인 3단계를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은 80점 중에서 39.3점으로 통합수준은 49.1%였으며, 전년인 2017년과 비교하면 3.0점 상승하였다. 전년 대비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만이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은 2017년에 비하여 각각 0.4점, 2.4점, 0.7점,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와 같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모두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남한주민 통합의식의 경우 2018년 남북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2017년에 비해 2.8점 상승하여 18.6점을 기록하였다.

다. 사회문화

- 2018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99.3점(구조통합지수 52.9점 + 의식통합지수 46.4점)으로 전년 대비 17.3점 상승하였다. 이 중에서 구조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지수 15.9와 관계적 통합지수 37.0점을 합하여 52.9점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3단계(41~70점)에 해당한다. 3단계는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가 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공동행사가 증가하였으나, 당국자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은 없었으나, 기존에 단일, 공동으로 마련한 법제들이 남아있고 북한에서의 법제화가 조금 진행되어 구조통합지수는 3단계로 상승하였다. 2017년 34점에서 18.9점이 올라 52.9점이다.
- 2008년~2018년 기간 동안 구조통합지수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2008년 15.9 2009년 -6.1, 2010년 0.4, 2011년 3.5, 2012년 0.5, 2013년 +2.1,

2014년 +2.9, 2015년 1.7, 2016년 2.3, 2017년 +3.1, 2018년 +18.9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고 폐회식 날에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유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반짝 상승하였으나, 2015년부터 DMZ 지뢰폭발 사고와 대북방송 재개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국제제재로 인하여 남북한 정치적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여 지수가 하락하였다. 2017년의 경우 북한에서 법제화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지수가 약간 상승하였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 활발한 활동과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공동행사 이루어짐에 따라 지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 2018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6.4점으로 2017년 47점보다 0.6점 하락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2017년 47점→2018 46.4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져 구조통합지수가 대폭 상승한 반면,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에서는 전년대비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남북한의 동질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2020년에 발표하게 될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의 전망을 예측해 보면, 2019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북간 합의의 이행이 답보상태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면서 북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망도 긍정적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다. 올해 구조지수가 대폭 상승하게 된 요인이었던 공동행사, 스포츠 부문에서의 협력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도 하락을 예측하게 되는 한 요인이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8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018년 남북통합지수는 248.5점으로 2017년 179.4점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동향과 한미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지수가 높아질지 여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통합지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190-200점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소폭의 등락을 보여 왔다. 2016년부터 2017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맞물리면서 남북간 교류가 최저치를 보인 반면, 2018년에 시작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높은 통합지수로 산출된 것이다. 즉, 2017년 최고조에 달했던 북핵 위기 이후에 남북 및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과 다양한 협의회 개최, 2018년 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등 정치적 호재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남북통합지수의 대폭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협상의 실질적 성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 같은 중요한 변화를 실제로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회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땀가를 둘러싸고 북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지 못하여 경제영역 통합지수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남북, 북미정상 회담이 개최되거나 스포츠 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높은 정치 의존성과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통합의식을 활용

남북통합지수의 변화 추이를 제도와 관계, 그리고 의식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치통합 및 관계적 통합 요인의 높은 견인효과와 점진적인 통합의식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먼저 2018년 남북통합지수는 그 변화에서 정치통합 또는 관계적 통합 요인의 남북통합지수 견인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즉, 2018년 남북통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제도통합 보다는 관계통합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관계통합의 기여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세 부문 중 정치부문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관계에 의한 남북통합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정치부문의 단절이나 개선에 대한 당국자들의 책임의식이 절실하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정치적 상황에 따른 빠른 반등이 가능한 정치부문에 대한 남북통합지수의 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통합의식이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통합지수와는 달리 의식통합지수의 변화는 정치적 또는 관계적 요인에 의한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또한 2018년 남북통합지수의 대폭 증가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및 이와 관련한 법제화 진행 등을 통해 남북한의 동질성이나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통합의식제고를 통해 남북간 경제 및 사회문화 통합의 자율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식통합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 즉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면 의식통합지수가 올라가고,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지식되면 의식통합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고려한 통합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북 경제제재 지속 하에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

햇볕정책을 계승해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탈냉전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에는 그간 악화된 북미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기존의 부정적 대립구도를 넘어 비핵-평화프로세스가 극적으로 전개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이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 제재해제나 경협 전면적 재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성공단사업의 중단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교류협력 부재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당국자 협상이나 문화체육 교류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당의 활성화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통합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북제재 속에서도 사회문화분야의 접촉과 교류,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을 활용한 농업 분야 교류 협력 등과 같은 길은 열려 있다. 또한 이산가족과 같은 남북의 공통적인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북한의 열악한 의료 보건 문제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노력의 참여, 산림 및 환경 분야 협력 등 남북간 교류 협력의 공간은 있다. 인식통합지수 조사에서 나타난 남북한 주민의 남북간 경제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감소와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는 이러한 협력 사업 추진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경제협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찾아 시도하고 이를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연계하는 노력은 향후 경제통합의 기반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과 통합

최근 미중간의 무역갈등,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과 중동지역 국가 간의 분쟁 등 새로운 국제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면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국면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의식통합의 역설적 현상과 같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남북관계는 지속가능성 및 통합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나 경제 영역과 달리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 지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정립이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남북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같은 교류 협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간의 차이를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할 것이다.

2

2019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2장. 의식통합지수

3장. 남북통합지수: 2011~2018

IPUS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음):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 + 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 + 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 - 위임적 제도 - 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 + 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 +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 +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 + 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 동일화폐 사용	30
	·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20
	·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20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20
	·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20
	·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 소득수준의 수렴	20
	· 이자율의 수렴	10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에 따라 15점 배점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점수는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 - 화폐 등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19년 7월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2018년 경제 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에 6.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 '북한 경제 분야 법제화 수준', '경제 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공동법제의 구속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시장을 목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 움직임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017년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 돌입할 것으로 강조한데 이어 2018년 들어 4월과 6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경제분야 법제화의 진전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비핵화 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UN제재 하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역시 진척이 없어 2018년의 경제 법제화 점수는 작년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표 2-2〉 경제분야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2.7	2.6	3.0	2.9	2.8	2.7	3.0	3.0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2.0	1.6	1.8	1.7	1.6	1.6	1.9	1.9
경제분야 공동법제 구축력	2.0	1.4	1.8	1.9	1.4	1.5	1.8	1.7
합계	6.7	5.6	6.6	6.5	5.8	5.8	6.6 ^a	6.6 ^a

(a :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 한 것이며,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09년 화폐 개혁의 단행으로 ‘사유재산권’ 부문의 점수가 하락하고,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하여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대와 동일한 1점을 유지하였다.
 - 법제의 실효화 점수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및 생산 수단의 소유가 일부 인정되어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바 있고, 헌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과 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 이를 ‘투자의 자유’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1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실효화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하였다.

- 하지만, 2009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 개혁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0.5점을 감점하였고, 2009년 실효화 점수는 1.5점을 부여하였다.
- 또한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한 점’을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2010년 실효화 점수는 0.5점 하락한 1점을 부여하였다.
- 2010년 이래로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부분에서 이렇다 할 등락 요인이 없어 2010년과 동일한 1점을 부여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6.6점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을 합하여 7.6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여 7.6점을 부여한다.
 - 현재 남북 사이의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7.6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1-3〉에 나타나 있다.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	0	1	0	1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2	0	2
1993	0	0	2	0	2
1994	0	0	2	0	2
1995	0	0	2	0	2
1996	0	0	2	0	2
1997	0	0	2	0	2
1998	0	0	3	2	5
1999	0	0	3	2	5
2000	0	0	3	2	5
2001	0	0	3	2	5
2002	0	0	3.5	2	5.5
2003	0	0	3.5	2	5.5
2004	0	0	4	2	6
2005	0	0	4	2	6
2006	0	0	4.5	2	6.5
2007	0	0	6.3	2	8.3
2008	0	0	6.3	2	8.3
2009	0	0	7.2	1.5	8.7
2010	0	0	6.7	1	7.7
2011	0	0	6.7	1	7.7
2012	0	0	5.6	1	6.6
2013	0	0	6.6	0.6*	7.2
2014	0	0	6.5	1	7.5
2015	0	0	5.8	1	6.8
2016	0	0	5.8	1	6.8
2017	0	0	6.6	1	7.6
2018	0	0	6.6	1	7.6

* 개성공단이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18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28.8억 달러로 전년대비 48.2% 감소한 수치이다. 수출은 85.7% 감소한 2.54억 달러, 수입은 30.6% 감소한 26.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17년 하반기 들어 북한의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금지한 UN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연달아 결의되었고 2018년에도 이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북한의 수출액 급감을 초래하였다. 수입의 경우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한의 특성 상 2017년까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 자본재와 운송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가 작동하면서 수입액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철강(HS72)으로 전체 수출에서 16.39%인 319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46.2% 감소한 수치이다. 기존까지 북한의 가장 주된 수출 품목이었던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HS27)는 2017년 하반기부터 발효된 무연탄 수출 전면 금수조치로 인해 97.2% 감소하였으며, 의류/부속품(HS62) 수출 역시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의 5억 달러에서 9천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HS27)이며 총 3.3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3.2%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과 비교하여 4.5% 감소하였다.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39)가 8.8%,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HS15)가 6.16%로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전기기기(HS85)와 기계류(HS84)는 UN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
- 2018년 남북교역액은 약 3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이는 모두 비상업적 거래에 국한되었다. 북·중 교역액은 48.2% 감소한 2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0년 5.24 조치에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면서 이후의 남북교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2018년에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및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반출이 예외적으로 승인되었을 뿐 남북 간 상업적 거래는 전무했다.
 - 이에 2018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그쳤다.
 - 2018년에도 북중 무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제2교역국이었던 남한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교역국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줄이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기존 60~70% 수준에서 2017~2018년에는 95%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 2018년 북한 무역현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재로 인한 수출의 급감과 주요 거래 품목의 변화이다.
- 2017년 UN 안보리는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철광석, 의류, 수산물 등에 대해 전면 금수 조치를 순차적으로 결의하였고 이것이 2018년에도 효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북한의 수출 구조가 변화되었다.
- 이상을 종합하면,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2017년의 0에서 0.2점 상승하여 0.2점을 기록하였다¹⁾.
- 남북한 간의 상업적 거래는 여전히 전면 중단된 상태이나, 정치적/문화적 교류에 따른 비상업적 물자 반출입이 재개된 점과, 북한의 총 교역액이 감소하여 남한과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점이 교역부문 점수 상승을 가져왔다.

1)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나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 교역(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와 56%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점으로 삼았다.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 무역액 ^a (A)	남북 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 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2015	6,252	2,711	8,963	30.2%	6.8
2016	6,532	332	6,879	4.8%	1.1
2017	5,550	1	5,551	0.0%	0.0
2018	2,843	31	2,875	1.1%	0.2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b. 통일부 주요 사업 통계, 『남북 교역액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8.10.04>.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 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18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2천7십만 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 2018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대비 110%가 증가한 1,812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DMZ 평화협력 포럼 지원’, ‘남북경협 및 금강산기업 피해지원’,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경협기업 보험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전년대비 3% 감소한 257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 2018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대북 투자 관련 기업의 운영 경비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작년대비 0.1점 증가한 0.3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협 재개가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대북 투자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투자 점수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

2)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점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9%이다.

-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규모 대북투자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투자부문 상대 점수는 1점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 *100	상대점수 D=(C*14) /5.87
	경협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17,720	0.00	0.0
1990					16,706	0.00	0.0
1991					15,554	0.00	0.0
1992					13,842	0.00	0.0
1993					11,678	0.00	0.0
1994					9,334	0.00	0.0
1995					5,215	0.00	0.0
1996	4.9		5	9.9	10,528	0.09	0.2
1997			1	1.0	10,309	0.01	0.0
1998			1	1.0	10,260	0.01	0.0
1999			125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	139.0	11,028	1.26	3.0
2004	76	81.4	12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349	2.18	5.2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4	0.54	1.3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 *100	상대점수 D=(C*14) /5.87
	경험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2010	17.7	45.2		62.9	13,960	0.45	1.1
2011	12.4	13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29	0.7
2013	11.5	74.6		86.1	16,602	0.52	1.2
2014	20.0	22.3		42.3	17,462	0.24	0.6
2015	20.6	3.6		24.2	16,386	0.15	0.4
2016	11.5	3.2		14.7	16,837	0.09	0.2
2017	8.64	2.66		11.3	16,247 ^d	0.07	0.2
2018	18.12	257		20.7	16,690 ^d	0.12	0.3

-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1,000원 = 1달러 적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검색일 2018.10.04
-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 c. UN,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 d. 2017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경제성장률 -4.1%를 적용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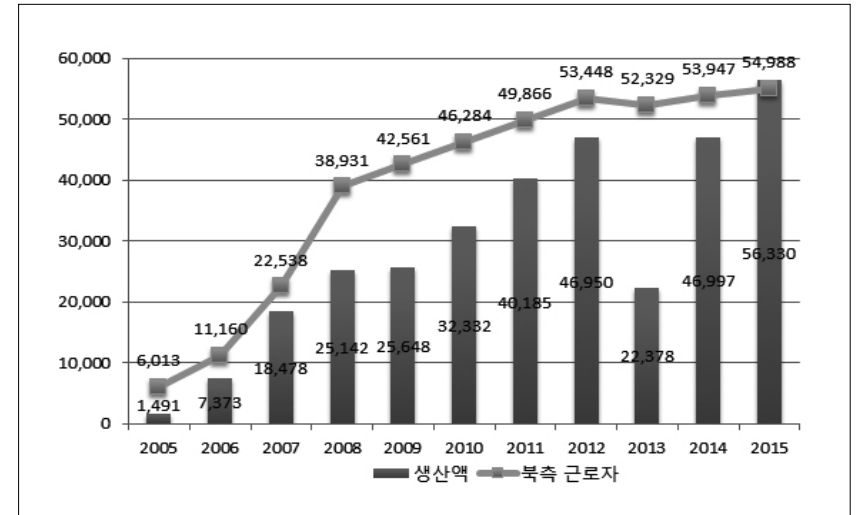
3) 노동부문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규모³⁾에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개성 공단에 약 5만 5천 명이 있었으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현재는 남한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가 없다.
- 이에 따라 2018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2017년과 동일한 0점을 기록하였다.

3) 정창무(2007) 인구가동 예측결과에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단위: 만 달러, 명)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2002	0	0.0
2003	0	0.0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b	1.9
2014	53,947	3.4
2015	54,988	3.4
2016	6,110 ^{c)}	0.4
2017	0	0.0
2018	0	0.0

a.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주요 통계", <http://www.unikorea.go.kr/cms/getFile.do?file=2017070714065518271.xls&orgname=%EA%B0%9C%EC%84%B1%EA%B3%B5%EB%8B%A8%EC%82%AC%EC%97%85_%EC%B5%9C%EC%A2%85.xls&mgmtId=MGMT_0000000350&siteId=SITE_00001&filePath=unikorea/common/file/&count=Y>.

b. 연말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c. 전년도 연말 노동인구 54,988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32/36)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17년 인적·물적 왕래가 전무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인적 왕래가 허용되었으므로 무역자유화 부문에 0.5점을 부여함.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같은 해 6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6년 2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2018년에도 남북 간 상품 교역이 여전히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2010년 이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승인이 불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1.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8년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합동 콘서트 및 남북 정상회담 등 문화, 정치 부문의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남한 인사의 방북이 허용되었으므로 인적 왕래가 전무하였던 2017년에 비해 0.5점 증가한 0.5점을 부여한다.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0	0.0	5.0	
1990	5.0	0.0	5.0	
1991	5.0	0.0	5.0	
1992	5.0	0.0	5.0	
1993	5.0	0.0	5.0	
1994	5.0	0.0	5.0	
1995	5.0	0.0	5.0	
1996	5.0	0.0	5.0	
1997	5.0	0.0	5.0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98	5.0	0.0	5.0	
1999	5.0	0.0	5.0	
2000	5.0	0.0	5.0	
2001	5.0	0.0	5.0	
2002	5.0	0.0	5.0	
2003	5.0	0.0	5.0	
2004	5.0	1.0	6.0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1)
2005	5.0	2.0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0	2.0	7.0	
2007	5.0	2.0	7.0	
2008	5.0	2.0	7.0	
2009	5.0	1.5	6.5	'12.1 조치' :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 거주인력 안정보장 문제 발생
2010	4.5	1.5	6.0	'5.24 조치' : 상품무역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약요인 발생
2011	4.5	1.5	6.0	
2012	4.5	1.5	6.0	
2013	2.6	1.5	4.1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적이동의 제한 지속
2015	4.5	1.5	6.0	
2016	0.5	0.2	0.7	개성공단 폐쇄(2월10일 이후)에 따른 점수 차감
2017	0.0	0.0	0.0	남북 상품 무역 및 인적 왕래 전면 중단
2018	0.0	0.5	0.5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18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매개제도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으나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회담 개최와 합의서 채택이 이루어짐에 따라 작년보다 0.5점 오른 3.5점을 부여한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18년에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매개 제도의 존재'에 대해 3점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제도의 작동' 점수는 0점이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철도 협력 및 도로 협력 분야에서 각 1건, 산림 협력 분야에서 2건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4건의 회담 모두 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진 것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4)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합의서 가중치 :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별점수=경제회담 개최 수+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1.5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0	3.0	2.0	3	0	0.0	3.0	0.5	5.5
2001	0.0	3.0	0.0	3	2	3.0	6.0	0.5	3.5
2002	0.0	3.0	2.0	14	11	16.5	30.5	1.5	6.5
2003	0.0	3.0	2.0	17	14	21.0	38.0	2.0	7.0
2004	0.0	3.0	2.0	13	8	12.0	25.0	1.5	6.5
2005	0.0	3.0	2.0	11	6	9.0	23.0	1.5	6.5
2006	0.0	3.0	2.0	8	3	4.5	12.5	1.0	6.0
2007	0.0	3.0	2.0	22	16	24.0	46.0	2.5	7.5
2008	0.0	3.0	0.0	3	1	1.5	4.5	0.5	3.5
2009	0.0	3.0	0.0	4	0	0.0	4.0	0.5	3.5
2010	0.0	3.0	0.0	3	0	0.0	3.0	0.5	3.5
2011	0.0	3.0	0.0	0	0	0.0	0.0	0.0	3.0
2012	0.0	3.0	0.0	0	0	0.0	0.0	0.0	3.0
2013	0.0	3.0	0.0	22	5	7.5	29.5	1.5	4.5
2014	0.0	3.0	0.0	3	0	0.0	3.0	0.5	3.5
2015	0.0	3.0	0.0	1	0	0.0	1.0	0.5	3.5
2016	0.0	3.0	0.0	0	0	0.0	0.0	0.0	3.0
2017	0.0	3.0	0.0	0	0	0.0	0.0	0.0	3.0
2018	0.0	3.0	0.0	4	4	6.0	10.0	0.5	3.5

a. 2000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매개제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였음.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6) 소득수준 수렴

- 2018년에 남한은 2.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북한은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남북한 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문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18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2.1% 정도이다.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711	16.0%	1.74
1990	835	6,498	12.8%	1.08
1991	753	7,496	10.0%	0.42
1992	659	7,966	8.3%	0
1993	547	8,692	6.3%	0
1994	432	10,129	4.3%	0
1995	239	12,222	2.0%	0
1996	476	13,016	3.7%	0
1997	461	11,992	3.8%	0
1998	455	7,916	5.7%	0
1999	451	10,199	4.4%	0
2000	461	11,767	3.9%	0
2001	475	11,095	4.3%	0
2002	467	12,635	3.7%	0
2003	470	14,045	3.3%	0
2004	472	15,739	3.0%	0
2005	547	18,295	3.0%	0
2006	574	20,616	2.8%	0
2007	596	22,813	2.6%	0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2008	550	20,361	2.7%	0
2009	495	18,222	2.7%	0
2010	570	22,110	2.6%	0
2011	639	24,315	2.6%	0
2012	645	24,731	2.6%	0
2013	668	26,210	2.5%	0
2014	699	28,099	2.5%	0
2015	652	27,405	2.4%	0
2016	667	27,813	2.4%	0
2017	640	28,566	2.2%	0
2018 ^a	655	30,693	2.1%	0

※ 자료: UN, "Per Capita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a. 2018년 소득은 2017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각 해에 발표된 UN 공식통계를 반영하여 재조정됨.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 현재 이 부문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 2018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3점 상승한 12.1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8년 소득은 2017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각 해에 발표된 UN 공식통계를 반영하여 재조정됨.
-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문화적 교류 재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물적 자원 교류 현황만으로 평가하면 2018년의 남북 경제통합 수준은 사실상 0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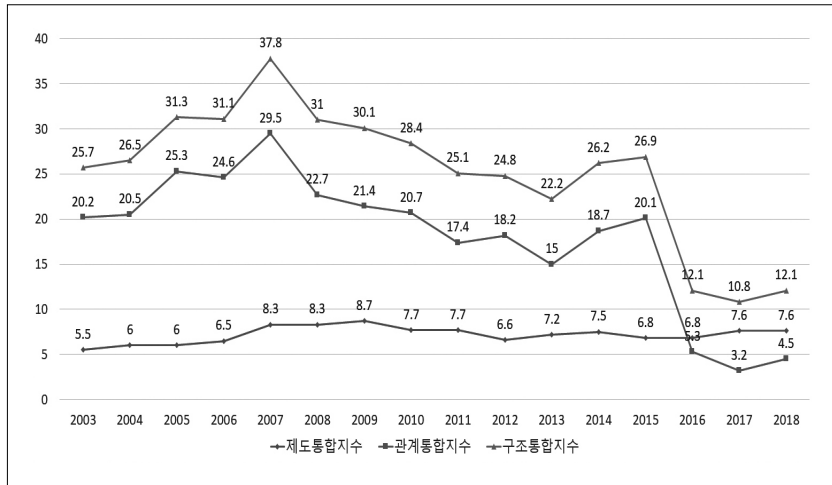
〈표 2-10〉 2017년/2018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7년	2018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교역	0.0	0.2	0.2	- 비상업적 물자 반출/입의 증가
	투자	0.2	0.3	0.1	- 대북 사업 운영 경비 지원 증가
	무역자유화	0.0	0.5	0.5	- 정치, 문화 교류 재개에 따른 제한적 방북 허용
	무역	3.0	3.5	0.5	- 인프라, 산림 협력 분야 회담 개최 및 합의서 채택
불변 부문	공동 법제화	7.6	7.6	-	- 북한 경제 제도 개선 및 남북 공동 법제 진전 없음
	공동제도와 정책	0	0	-	- 공동의 경제정책 (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	0	-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노동	0	0	-	- 남한 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 전무함
	소득 수렴	0	0	-	- 남북간 소득격차 소폭 확대
	이자율 수렴	0	0	-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	0	-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	0	-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자본시장 통합도	0	0	-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10.8	12.1	1.3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5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0.9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0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2.9	0.0	5.0	0.0	0.0	0.0	0.0	0.0	0.0	17.0	1단계
2000	0.0	0.0	5.0	4.0	0.8	0.0	5.0	5.5	0.0	0.0	0.0	0.0	0.0	20.3	1단계
2001	0.0	0.0	5.0	3.4	3.6	0.0	5.0	3.5	0.0	0.0	0.0	0.0	0.0	20.4	1단계
2002	0.0	0.0	5.5	5.0	1.9	0.0	5.0	6.5	0.0	0.0	0.0	0.0	0.0	23.8	2단계
2003	0.0	0.0	5.5	5.2	3.0	0.0	5.0	7.0	0.0	0.0	0.0	0.0	0.0	25.7	2단계
2004	0.0	0.0	6.0	4.4	3.6	0.0	6.0	6.5	0.0	0.0	0.0	0.0	0.0	26.5	2단계
2005	0.0	0.0	6.0	5.8	5.6	0.4	7.0	6.5	0.0	0.0	0.0	0.0	0.0	31.3	3단계
2006	0.0	0.0	6.5	7.0	3.9	0.7	7.0	6.0	0.0	0.0	0.0	0.0	0.0	31.0	3단계
2007	0.0	0.0	8.3	8.5	5.1	1.4	7.0	7.5	0.0	0.0	0.0	0.0	0.0	37.9	3단계
2008	0.0	0.0	8.3	7.2	2.6	2.4	7.0	3.5	0.0	0.0	0.0	0.0	0.0	31.1	3단계
2009	0.0	0.0	8.7	7.4	1.3	2.7	6.5	3.5	0.0	0.0	0.0	0.0	0.0	30.1	2단계
2010	0.0	0.0	7.7	7.1	1.2	2.9	6.0	3.5	0.0	0.0	0.0	0.0	0.0	28.3	2단계
2011	0.0	0.0	7.7	4.8	0.5	3.1	6.0	3.0	0.0	0.0	0.0	0.0	0.0	25.0	2단계
2012	0.0	0.0	6.6	5.0	0.9	3.3	6.0	3.0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0	2단계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2	2단계
2015	0.0	0.0	6.8	6.8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9	2단계
2016	0.0	0.0	6.8	1.1	0.2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2	0.0	0.0	3.0	0.0	0.0	0.0	0.0	0.0	10.8	1단계
2018	0.0	0.0	7.6	0.2	0.3	0.0	0.5	3.5	0.0	0.0	0.0	0.0	0.0	12.1	1단계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조 1] 북한소득 자료를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통합지수 산정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김석진·이근(2007)과 김병연(2008)⁵⁾이 추정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평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령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우선 2018년 투자부문에서는 2017년 대비 0.1점 오른 0.2점을 부여한다.

5)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2007), pp. 564-582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2008 가을호, pp. 19-42.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반조성(경상지출)	남북교류협력지원(용자)					
1989					45,160	0.00	0.0
1990					41,979	0.00	0.0
1991					40,437	0.00	0.0
1992					36,293	0.00	0.0
1993					34,198	0.00	0.0
1994					34,272	0.00	0.0
1995					31,065	0.00	0.0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0	0.0
1998			1.0	1.0	27,801	0.00	0.0
1999			125.0	125.0	30,407	0.41	1.4
2000	14.6		22.0	36.6	28,539	0.13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4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27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3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1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66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0.97	3.3
2008	110.0	36.6		146.6	33,295 ^d	0.4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0	0.7
2010	17.7	45.2		62.9	32,830	0.19	0.7
2011	12.4	13.0		25.4	33,093	0.08	0.3
2012	23.8	22.1		45.9	33,523	0.14	0.5
2013	11.5	74.6		86.1	33,892	0.25	0.9
2014	20	22.3		42.3	34,231	0.12	0.4
2015	20.6	3.6		24.2	33,854	0.07	0.2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 야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2016	11.5	3.2		14.7	35,175	0.04	0.1
2017	8.64	2.66		11.3	33,944	0.03	0.1
2018	18.1	2.57		20.7	32,552	0.06	0.22

-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평가 자료에서도 북한소득이 남한소득의 대비 1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단위: 달러, %)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260	25.1%	3.5
1991	1,973	9,330	21.1%	2.6
1992	1,745	10,020	17.4%	2.0
1993	1,619	10,850	14.9%	1.3
1994	1,605	11,970	13.4%	1.1
1995	1,442	13,240	10.9%	0.4
1996	1,393	14,370	9.7%	0.0
1997	1,230	15,300	8.0%	0.0
1998	1,267	14,410	8.8%	0.0
1999	1,377	16,200	8.5%	0.0
2000	1,287	17,950	7.2%	0.0
2001	1,368	19,050	7.2%	0.0
2002	1,375	20,690	6.6%	0.0
2003	1,405	21,290	6.6%	0.0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2004	1,410	22,900	6.2%	0.0
2005	1,464	24,010	6.1%	0.0
2006	1,461	25,730	5.7%	0.0
2007	1,392	27,740	5.0%	0.0
2008	1,430	28,650	5.0%	0.0
2009	1,410	28,250	5.0%	0.0
2010	1,395	30,410	4.6%	0.0
2011	1,399	31,410	4.5%	0.0
2012	1,411	32,430	4.4%	0.0
2013	1,420	32,850	4.3%	0.0
2014	1,427	33,690	4.2%	0.0
2015	1,404	35,300	4.0%	0.0
2016	1,453	36,730	4.0%	0.0
2017	1,395	38,340	3.6%	0.0
2018	1,388	40,090	3.5%	0.0

- a.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 Byung-Yeon Kim(2008).
b. World bank,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PP.CD, 검색일 2018.10.05).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4점 하락한 10.7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1단계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차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7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1.1	0.0	0.0	0.0	0.0	7.2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동조화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4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1.4	0.0	5.0	0.0	0.0	0.0	0.0	0.0	0.0	15.5	1단계
2000	0.0	0.0	5.0	4.0	0.4	0.0	5.0	5.5	0.0	0.0	0.0	0.0	0.0	19.9	1단계
2001	0.0	0.0	5.0	3.4	1.8	0.0	5.0	3.5	0.0	0.0	0.0	0.0	0.0	18.7	1단계
2002	0.0	0.0	5.5	5.0	0.9	0.0	5.0	6.5	0.0	0.0	0.0	0.0	0.0	22.9	2단계
2003	0.0	0.0	5.5	5.2	1.5	0.0	5.0	7.0	0.0	0.0	0.0	0.0	0.0	24.2	2단계
2004	0.0	0.0	6.0	4.4	1.8	0.0	6.0	6.5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05	0.0	0.0	6.0	5.8	3.1	0.5	7.0	6.5	0.0	0.0	0.0	0.0	0.0	28.9	2단계
2006	0.0	0.0	6.5	7.0	2.3	0.7	7.0	6.0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07	0.0	0.0	8.3	8.5	3.3	1.4	7.0	7.5	0.0	0.0	0.0	0.0	0.0	36.0	3단계
2008	0.0	0.0	8.3	7.2	1.5	2.4	7.0	3.5	0.0	0.0	0.0	0.0	0.0	30.0	2단계
2009	0.0	0.0	8.7	7.4	0.6	2.7	6.5	3.5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10	0.0	0.0	7.7	7.1	0.6	2.9	6.0	3.5	0.0	0.0	0.0	0.0	0.0	27.8	2단계
2011	0.0	0.0	7.7	4.8	0.3	3.1	6.0	3.0	0.0	0.0	0.0	0.0	0.0	24.9	2단계
2012	0.0	0.0	6.6	5.0	0.5	3.3	6.0	3.0	0.0	0.0	0.0	0.0	0.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0	0.0	7.5	5.3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1	2단계
2015	0.0	0.0	6.8	6.8	0.2	3.4	6.0	3.5	0.0	0.0	0.0	0.0	0.0	26.8	2단계
2016	0.0	0.0	6.8	1.1	0.1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7	1단계
2018	0.0	0.0	7.6	0.2	0.3	0.0	0.5	3.5	0.0	0.0	0.0	0.0	0.0	12.1	1단계

2. 정치

가. 지수구성

□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적 통합	· 정치·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 실무정치회담	20
	· 고위급 정치회담	20
	· 군사회담	20
	· 의회회담	20
	· 대화·회담의 정례화	10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 군비축소	10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 21-40
- 3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제도화 진행): 81-100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변인으로

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군사)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10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남북 통합지수에서 가정한 정치 분야의 공동 집행기구란 추후 남북 연합이나 남북 연방과 같이 통합된 정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의 정치활동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중앙집행기구로서, 그동안 남북간에는 공식적인 중앙집행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바 없다.
- 다만 2018년 수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그 합의의 결과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설기구인 공동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9월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군사영역에서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합의된 '9.19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동연락사

무소는 상설 기구이긴 하지만 남북간의 회담이나 협의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을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공동 집행기구라고 보긴 어렵다.

- 따라서 2018년 정치와 군사영역에서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점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 (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18년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2017년과 비교할 때, 기존의 선군정치나 병진노선으로부터 약간 변화했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0일, 북한은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과 ‘경제·핵 병진노선 승리 및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고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 기술 이전 금지’를 결정한 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천명했다. 동시에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대화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점에선 정치체제의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자원을 경제 발전으로 이동하는 사회주의 체제이행의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체제 변화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2018년 정치제도 단일화 부문의 점수는 1.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2019년 5월~8월 10명의 북한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0점이다.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5.5	2.8	6/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3.0	1.5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3	1.7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아진 것으로 없으므로 2018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권,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2-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18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6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7점이 된다.⁶⁾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	1
1990	1.0	0	1
1991	1.0	0	1
1992	2.0	0	2
1993	2.5	0	2.5
1994	2.6	0	2.6

6)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1995	3.1	0	3.1
1996	3.2	0	3.2
1997	3.3	0	3.3
1998	3.8	0	3.8
1999	4.3	0	4.3
2000	4.4	0	4.4
2001	4.5	0	4.5
2002	4.6	0	4.6
2003	4.7	0	4.7
2004	5.0	1	6.0
2005	5.1	1	6.1
2006	5.2	1	6.2
2007	5.3	1	6.3
2008	5.3	1	6.3
2009	5.4	1	6.4
2010	4.8	1	5.8
2011	4.8	1	5.8
2012	4.5	1	5.5
2013	4.9	1	5.9
2014	4.9	1	5.9
2015	4.5	1	5.5
2016	4.8	1	5.8
2017	5.8	1	6.8
2018	6	1	7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18년에는 정치분야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군사분야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공동 집행기구에 대한 논의로 보기

어려워 공동집행기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으로의 전환을 천명과 국제사회와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을 공표한 것을 고려해 2018년 이 항목의 점수는 1.5 점이다.

- 2018년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작년보다 1점 상승한 1.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7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	0	1.0	1.0
1990	0	0	1.0	1.0
1991	0	0	1.0	1.0
1992	0	0	2.0	2.0
1993	0	0	2.5	2.5
1994	0	0	2.6	2.6
1995	0	0	3.1	3.1
1996	0	0	3.2	3.2
1997	0	0	3.3	3.3
1998	0	0	3.8	3.8
1999	0	0	4.3	4.3
2000	0	0	4.4	4.4
2001	0	0	4.5	4.5
2002	0	0	4.6	4.6
2003	0	0	4.7	4.7
2004	0	0	6.0	6.0
2005	0	0	6.1	6.1
2006	0	0	6.2	6.2
2007	0	0	6.3	6.3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2008	0	0	6.3	6.3
2009	0	0.5	6.4	6.9
2010	0	1.0	5.8	6.8
2011	0	1.0	5.8	6.8
2012	0	1.0	5.5	6.5
2013	0	0.5	5.9	6.4
2014	0	0.5	5.9	6.4
2015	0	0.5	5.5	6.0
2016	0	0.5	5.8	6.3
2017	0	0.5	6.8	7.3
2018	0	1.5	7	8.5

다. 관계통합지수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 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 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담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실무정치회담은 의전·경호·보도분야 실무회담이 4월5일, 4월 18일, 4월23일 등 총 세 차례, 그리고 통신분야 실무회담은 4월7일, 4월14일 두 차례 열려 총 다섯 차례 열렸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실무정치회담은 9월 14일 한 차례 열렸으며 11월 23일에는 남북통신실무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2018년도에 개최된 실무정치회담 수는 총 일곱 차례이다.
- 2018년도 실무정치회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횟수에 0.2점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1.4점을 부여한다.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	1.0
1990	11	2.2
1991	10	2.0
1992	77	15.4
1993	4	0.8
1994	10	2.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2	0.4
1999	3	0.6
2000	13	2.6
2001	0	0.0
2002	2	0.4
2003	1	0.2
2004	0	0.0
2005	6	1.2

2006	3	0.6
2007	9	1.8
2008	0.2	0.0
2009	4	0.8
2010	0	0.0
2011	0	0.0
2012	0	0.0
2013	1	0.2
2014	1	0.2
2015	0	0.0
2016	0	0.0
2017	0	0.0
2018	7	1.4

※ 자료 출처 :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18년도에는 4월27일과 5월26일, 9월 18~20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1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의 참가 여부 관련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단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참가, 3월5일 대북특사방북, 3월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 6월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10월 15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등 총 8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등의 가중치를 아래 표와 같이 반영하여 2018년도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24.5점을 부여한다.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5점	×2점	×1.5점	×0.8점		
1989					0	0
1990		3			3	6
1991		2			2	4
1992		3			3	6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2	2	1.6
2000	1		4		5	11
2001			2		2	3.0
2002			2		2	3.0
2003			4		4	6
2004			2		2	3.0
2005			3	1	4	5.3
2006			2		2	3.0
2007	1	1	2		4	10
2008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1	0	1	1.5
2015	0	0	1	1	2	2.3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2.5	0	8	0	11	20

* 2018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은 약식회담으로 진행되어 1/2의 점수 부여하며 산출된 가중치 점수는 24.5점
이나 배점 체계상의 만점이 20점이므로 20점을 부여함

3) 군사회담

- 2018년도에는 6월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월31일 제9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10월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등 총 세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으며 9월13일부터 14일까지 제40차 남북군 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 2018년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 점수는 각 종류별 회담의 가중치를 아래 표와 같이 반영하여 3.4점을 부여한다.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	0
1990				0	0
1991				0	0
1992				0	0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0	0
2000	1		3	4	3.2
2001			2	2	0.8
2002			9	9	3.6
2003			6	6	2.4
2004		2	3	5	3.2
2005			3	3	1.2

2006		2	2	4	2.8
2007	1	3	7	11	7.8
2008	0	0	2	2	0.8
2009	0	0	0	0	0
2010	0	0	2	2	0.8
2011	0	0	1	1	0.4
2012	0	0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1	1	0.4
2015	0	0	0	0	0
2016	0	0	0	0	0
2017	0	0	0	0	0
2018	0	3	1	4	3.4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4) 의회회담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월 7일 한국 의회는 국회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고 9월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회의장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측에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안 친서 발송하는 등 남북간 국회 교류를 요청했으나 의회 회담이 실제로 개최되진 못했다. 따라서 점수는 0점이며, 정당 교류와 정치인 교류도 없었으므로 총 점수는 0점이다.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가중치	×4점	×3점	×2점	×1점	×0.4점	×0.2점	
1989					2		0.8
1990					1		0.4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1991						1	0.2
1992							0
1993							0
1994							0
1995							0
1996							0
1997							0
1998							0
1999						1	0.2
2000						3	0.6
2001						2	0.4
2002						3	0.6
2003						2	0.4
2004					1	4	1.2
2005				1		2	1.4
2006			1			3	2.6
2007						9	1.8
2008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1	0.2
2010	0	0	0	1	0	0	0.2
2011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점
2. 제1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실무회담을 통해 민간 분야 공동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으므로 0점이다.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
2002	-	(민간)	(민간)-서울		0
2003	(민간)- 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 -서울		5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 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2008	-	-	-	-	0
2009	-	-	-	-	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11	-	-	-	-	0
2012	-	-	-	-	0
2013	-	-	-	-	0
2014	-	-	-	-	0
2015	-	-	-	-	0
2016	-	-	-	-	0
2017	-	-	-	-	0
2018	-	-	-	-	0

※ 자료 :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년-2017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8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9월 14일에는 가시적인 매개체로서 상설 연락기구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각종 회담, 협의 업무, 교류 협력을 지원했다. 아울러 서해 군통신선, 해상 국제 상선공통망, 동해의 군 통신선 등이 약 10년만에 복원되어 운용이 정상화되었다. 9월 14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소되었다.

□ 2018년도 매개제도 영역의 평가는 4월 27일 2018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월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총 네 개의 합의서와 1월9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3월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6월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6월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8월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10월15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등 여섯 개의 공동보도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각 매개제도의 가중치를 반영한 2018년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는 4.8점이다.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	0	0	0
1990	0	1	0	0.5
1991	0	1	2	1.1
1992	3	10	1	14.3
1993	0	0	0	0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1994	0	2	0	1
1995	0	1	0	0.5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1	0	0.5
2000	2	7	5	11
2001	2	0	1	6.3
2002	2	0	4	7.2
2003	2	0	4	7.2
2004	2	1	2	7.1
2005	2	2	4	8.2
2006	2	1	1	6.8
2007	2	5	3	9.4
2008	1	0	0	3
2009	0	0	1	0.3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1	0.3
2015	0	0	2	0.6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1	4	6	4.8

7) 대화·회담의 정례화

□ 2018년에는 정치분야 회담이 활발히 개최되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에서 5월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고 직통 전화로 소통하고,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해 실제로 가을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9월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상의 한국 답방을 약속했지만 연내에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2.5점이다.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며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기적 개최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음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 2010년부터 이 변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음.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정례화 수준 (10)		정례화 수준 (10)	
1989	0	2004	2.5
1990	2.5	2005	2.5
1991	2.5	2006	2.5
1992	2.5	2007	2.5
1993	0	2008	0
1994	0	2009	0
1995	0	2010	0
1996	0	2011	0

1997	0	2012	0
1998	0	2013	0
1999	0	2014	0
2000	2.5	2015	0
2001	2.5	2016	0
2002	2.5	2017	0
2003	5	2018	2.5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주변국 외교도 활성화 되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2018년 5월 9일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적 협력을 약속하고, 포괄적 해결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남북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3개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외교군사적 분야에서 남북한간 협력은 없었다.
- 따라서 2018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외교·군사적 협력은 0점이다.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2점	
1989						0
1990						0
1991					2	0.4
1992					2	0.4
1993					3	0.6
1994					1	0.2
1995						0
1996				1	1	0.7
1997	7				1	3.7
1998	4				1	2.2
1999	5					2.5
2000			1		1	0.7
2001			1			0.5
2002			1			0.5
2003		1	1			1.0
2004		4	1			2.5
2005		3	1		2	2.4
2006		1	1			1.0
2007		4	1		2	2.9
2008		2	1		0	1.5
2009			0			0
2010			0			0
2011			2		1	1.2
2012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 자료 :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상정책』, 165~170쪽;

※ 자료 :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2018년 남북한 통합병력 수는 187.9만여 명으로 병력감축 수준은 2.1점으로 계산된다.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89	65만명	98만명	163만명	27.0	1.8
1990	65.5만명	99만명	164.5만명	25.5	1.7
1991	65.5만명	99.5만명	165만명	25.0	1.7
1992	65.5만명	101만명	166.5만명	23.5	1.6
1993	65.5만명	103만명	168.5만명	21.5	1.4
1994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5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6	69만명	105.5만명	174.5만명	15.5	1.0
1997	69만명	114.7만명	183.7만명	6.3	0.4
1998	69만명	116만명	185만명	5.0	0.3
1999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0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1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2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3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4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5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6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7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8	65.5만여명	119만여명	184.5만여명	5.5	0.4
2009	65만여명*	122만여명	187만여명	3.0	0.2
2010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1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2	63.9만여명	119만여명	182.9만여명	7.1	0.5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2013	63.3만명	119만여명	182.3만여명	7.7	0.5
2014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5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6	62.5만여명	128만여명	190.5만여명	-.05	0.0
2017	59.9만여명	128만여명	187.9만여명	2.1	0.1
2018	59.9만여명	128만여명	187.9만여명	2.1	0.1

※ 자료 : 2012년 국방백서; 2011년 국방백서 미발간,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2010년 국방백서 부록 참고; 현재 국방백서 미발간(10월 발간 예정)→국방부 기본정책과 (02-748-6231)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1996년 남한의 병력 3만 5천 증가는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인한 것임.⁷⁾ 『국방백서』, 1988~2000년 각 연도, 2004, 2006년도; 2001~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책자; 2008년 자료 출처: 2008국방백서 부록 참고 (2008년 12월 기준)

※ 2013년 자료 출처:

1. 남한 병력-『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13쪽, 2014년 발행,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에서 열람. 국방부 홈페이지 안에서 2013년 말 병력이 '63.3만명'으로 표기된 e-book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찾아서 위 표에 반영하였음.
2. 북한 병력-『북한이해 2013』 108쪽,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이 자료는 사실 (2012 국방백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

※ 2014년 자료 출처: 2014년 국방백서, 239쪽, 2014년 12월 발간.

※ 2015년 자료 출처: 북한이해 2016, 145쪽, 2016년

※ 2016년 자료 출처: 2016년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236쪽, 2016년 12월 발간.

※ 2017년 자료 출처: 2018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244쪽, 2019년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로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부문 점수는 다음 <표 2-33>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 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점수	내용
10점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점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점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7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6.5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점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점	라디오, 신문,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점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7) 국방부, 『1996-1997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6), 64쪽.

점수	내용
3.5점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3점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점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점	군사적 긴장과 대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
1990	4
1991	4
1992	2
1993	3
1994	3
1995	3.5
1996	1
1997	2.5
1998	3.5
1999	1.5
2000	4
2001	4
2002	2
2003	4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2004	4.5
2005	5
2006	4
2007	4.5
2008	2
2009	1.5
2010	1
2011	2.5
2012	2.5
2013	1
2014	2
2015	2
2016	1
2017	1
2018	6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한·미 올림픽 기간중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합의되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관련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결과 북한은 군사적 위협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시 비핵화 입장을 천명했고,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 또한 대화 기간 시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 이어서 북한은 4.20 당 중앙위 제 7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핵, ICBM 시

- 험 중지 및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하고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를 결정했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 후 확성기들을 철거했다.
-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은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개막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재확인 했다. 이어서 북한은 5.23~25.기간 동안 풍계리 북부 핵실험장 폐기 계획 발표했다.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고,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전쟁포로·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6.14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04년 6.4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이행,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 적대행위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7월 31일 제 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JSA 비무장화, DMZ내 유해공동방굴 및 상호 시범적 GP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 이에 조응해 한미간 7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유예되었으며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활동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9월 18~20일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 했는데, 이에 따르면 1.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2.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4.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 영구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회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남북 JSA 및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 개시했다.
- 10. 26.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① 11.1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 ② 11월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이행,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완료, 이후 모든 GP 철수 위한 실무협의로도 진행 ③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정상 진행을 확인하고, 상호 확인 및 '19.4월 본격 진행을 위한 제반 준비 이행 합의 ④ 한강(임진강) 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 11월초 공동 수로조사 진행 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5월 합의)」준용, 남북군사공동위 조속 구성 ⑥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의 정상 진행 확인·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

□ 11월 1일에는 남북간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며, 11월 10에는 남북 시범철수 GP 화기, 장비, 병력 철수가 완료되었고 11. 30일 유해공동발굴지역 지뢰 제거 완료했으며, 시범철수 GP시설이 완전 파괴되었다. 이어 비무장지대 GP 철수 및 상호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 이상의 남북관계 발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2018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는 6점이다. 6점은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이다.

〈표 2-34〉 2018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1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년 신년사 육성발표. •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불위협 언급 청와대, 北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환영의사 표명
1.3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 재가동
1.4	한·미,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합의
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보도문 채택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적극협력 (고위급 대표단 및 기자단 파견) ②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마련 및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를 위한 공동노력 ③ 남북선언 존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1.17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개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1.26	한·미, '외교적 북핵문제 해결' 논의 (국방장관 회담, 하와이)
2.7	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北 고위급 대표단 방남 관련 제재면제 요청
2.9	北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22명) 방남 (北 전용기 이용, 인천공항 도착) 남북 선수단,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동시 입장
2.10	대통령, 北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및 오찬 (청와대) • 김여정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및 대통령 방북 초청 의사 전달
2.25	北,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 고위급 대표단 8명 (단장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 (경의선 육로 이용)
2.26	대통령,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3.1	대통령 제99주년 3.1절 기념사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변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갈 것"
3.5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0명, ~3.6 서해 직항로 이용)
3.6	안보실장,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발표 ①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② 정상간 핫라인 설치,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 ③ 北,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시 비핵화 입장 천명 ④ 北,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용의 표명 ⑤ 北, 대화 기간 추가 핵실험 및 단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 재개 없을 것 및 핵무기·재래식 무기를 우리 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⑥ 우리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
3.9	안보실장,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브리핑 차 방비 (~10)
3.25	김정은, 비공식 중국 방문 및 북중 정상회담 (~28) • 김일성·김정일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은 북한의 변치않는 입장 •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호응하여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동시에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3.29	中 양제츠 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 (~30)
4.17	트럼프 美 대통령,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4.18	트럼프 美 대통령, "北 완전 비핵화 달성 시 밝은 길 있음. 회담 성공 위해 무엇이든 할 것. 성과 없다면 회담장 떠날 것"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4.20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개통 및 시범통화 실시 北,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실시 • 경제·핵 병진노선 승리 및 핵무기 병기화 실현 천명 • 4.21부터 핵·ICBM 시험 중지 및 북부 핵실험장 폐기 •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천명 •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대화 등
4.23	軍, 남북정상회담 계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4.23 0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발표 대통령,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언급 (수석 보좌관 회의)
4.27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①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③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5.1	軍, 대북확성기 철거 (~4) 대통령, UN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 참가 및 판문점 선언에 대한 유엔의 환영 및 지지선언을 요청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5.3	김정은 위원장,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북중 간 단결 심화발전 및 한반도 정세흐름 발전방향 등 의견교환)
5.4	국가안보실장, 볼턴 美 국가안보보좌관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협의 (백악관)
5.7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8, 중국 다롄)
5.9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 (도쿄)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접견 •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대안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표명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에 사의 표명 • 북미정상회담 관련 만족한 합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송환 등
5.10	트럼프 美 대통령, 송환된 미국인 억류자 3명 공항 마중 및 북미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개최 발표
5.22	한미정상회담 (백악관) • 북미정상회담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 최근 북한 태도 평가, 완전한 비핵화 천명 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체제불안감 해소방안 등 논의
5.24	北,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국제 기자단에 공개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김정은 위원장에 공개서한)
5.25	北,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유감 표명 및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력 •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6.1 남북고위급회담 및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 회담 개최 • 앞으로도 언제든지 격의 없이 소통
5.30	北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방문 (~6.2)
6.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진행 • 공동연락사무소 조속히 개소 •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방안 모색 •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 회담,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 후속회담 개최
6.10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도착 및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센토사 섬)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평화체제 구축 위해 공동 노력 •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 美 전쟁포로·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 공동성명 채택
6.14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서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04년 6.4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이행,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 • 적대행위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교환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6.19	한미, 8월 실시 예정이었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 유예 결정 발표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20, 베이징) • “북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전망 등 공동 관심사 문제 관련 의견 교환 및 공통된 인식 형성” (조선중앙통신 보도)
6.28	한미국방장관 회담 (서울) •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항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
7.6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 (~7)
7.12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 간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7.6일자 친서 공개 (트위터)
7.24	트럼프 美 대통령,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항 해체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으며 환영 입장 표명 (해외참전용사회 전국대회 연설)
7.27	北, 미군 유해 55구 송환 (원산)
7.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 JSA 비무장화 • DMZ 내 유해공동발굴 및 상호 시범적 GP 철수 • 서해 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
8.1	트럼프 美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 (트위터)
8.4	北, 비핵화 관련 “동시 행동, 단계적 방식” 주장 (ARF 외교장관회의 연설, 싱가포르) 美,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답신 전달 (ARF 외교장관회의)
8.1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
9.4	대통령 특사단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및 대통령 친서 전달 ① 9.18~20 2박3일 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②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및 대미 협력 의사 표명 ③ 정상회담 계기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 합의 ④ 정상회담 개최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9.18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20) ①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에 합의 ② 상호호혜에 기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③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④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는데 대한 인식 공유 ⑥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9.24	UN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뉴욕) • 문재인 대통령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 • 트럼프 美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
9.26	UN 총회 계기 북미 외교장관회담 (뉴욕) •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평양 초청 수락 (국무부 보도자료)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7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 면담 및 오찬 (평양) 이후 문재인 대통령 예방 (서울)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 • 北 비핵화 조치들과 美 정부의 참관 문제 및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 • 北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10.26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① 11.1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 등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확인 ② 11월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이행,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완료, 이후 모든 GP 철수 위한 실무협약도 진행 ③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정상 진행 상호 확인 및 '19.4월 본격 진행을 위한 제반 준비 이행 합의 ④ 한강(임진강) 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단(각 10명) 구성, 11월초 공동 수로조사 진행 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5월 합의)」 준용, 남북군사공동위 조속 구성 ⑥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의 정상 진행 확인·평가
11.7	美,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국무부 대변인 성명)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북한과 다른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 언급
11.10	남북, 시범철수 GP 화기·장비·병력 철수 완료
11.14	대통령, “내년 韓·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검토” 언급 한·러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
11.15	대통령,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 면담 (싱가포르)
11.16	北, 역류된 美 국적자 1명 추방 (北 조선중앙통신 보도)
11.17	한중정상회담 개최 (파푸아뉴기니) •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11.20	北,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방식으로 제거
11.30	한미정상회담 개최 (부에노스아이레스) •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 유지가 중요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에 추가적 모멘텀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함
12.12	시범철수 GP 남북 공동검증
12.17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2.26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성 판문역)
12.30	北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할 것 등

* 자료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상호체제인정

- 상호체제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문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점수	내용
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 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남한의 경우, 2015년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한다.
- 2005~2010년 기간에 2점으로 올라갔던 남북교류관련법은 2011년 이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으로 1.5점에서 한 단계 더 떨어

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 협력이 적극 추진되었고, 체육, 문화, 산림, 적십자, 이산가족,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제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제외한 교류 협력이 재활성화 된 것으로 보고 2015년 수준의 1.5점을 부여했다.

- 국가보안법은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는 않으며 간헐적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1991년 이후 0.1점을 부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교류협력 관련법은 전무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비되는 형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현재 0.3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2018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1.9점으로 평가한다.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989	0.5	0	0	0	0.5
1990	1.0	0	0	0	1.0
1991	1.0	0.1	0	0	1.1
1992	1.0	0.1	0	0	1.1
1993	1.0	0.1	0	0	1.1
1994	1.0	0.1	0	0	1.1
1995	1.0	0.1	0	0.1	1.2
1996	1.0	0.1	0	0.1	1.2
1997	1.0	0.1	0	0.1	1.2
1998	1.0	0.1	0	0.1	1.2
1999	1.0	0.1	0	0.2	1.3
2000	1.0	0.1	0	0.2	1.3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2001	1.0	0.1	0	0.2	1.3
2002	1.5	0.1	0	0.2	1.8
2003	1.5	0.1	0	0.2	1.8
2004	1.5	0.1	0	0.3	1.9
2005	2.0	0.1	0	0.3	2.4
2006	2.0	0.1	0	0.3	2.4
2007	2.0	0.1	0	0.3	2.4
2008	2.0	0.1	0	0.3	2.4
2009	2.0	0.1	0	0.3	2.4
2010	2.0	0.1	0	0.3	2.4
2011	1.5	0.1	0	0.3	1.9
2012	1.5	0.1	0	0.3	1.9
2013	1.5	0.1	0	0.3	1.9
2014	1.5	0.1	0	0.3	1.9
2015	1.5	0.1	0	0.3	1.9
2016	1.5	0.1	0	0.3	1.9
2017	1.0	0.1	0	0.3	1.4
2018	1.5	0.1	0	0.3	1.9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변인의 점수를 합계로 산정된다.
- 2018년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만점인 20점이다.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 회담과, 군사분야 회담도 이루어져 실무회담은 1.4, 군사회담은 3.4점을 기록했다. 매개제도 구성 활동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4.8점

이고,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져 긴장도가 낮아져 6점을 기록했다. 다만 의회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군축 부문 점수도 전년과 동일한 0점이다. 2018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45.6점이 상승한 48점을 기록했다.

〈표 2-37〉 2017년/2018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2017년	2018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0.0	1.4	+1.4	정상회담 전후 회담
고위급정치회담	0.0	20.0	+20.0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회담	0.0	3.4	+3.4	정상회담 후속 회담
의회회담	0.0	0.0	-	제안이 실현되지 못함
정치분야공동행사	0.0	0.0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0.0	4.8	+4.8	남북연락사무소
대화·회담 정례화	0.0	2.5	+2.5	
외교군사적 협력	0.0	0.0		
군축	0.1	0.1		남북 병력수 유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1.0	6.0	+5.0	북미 정상회담과 주변국 협력
상호체제인정	1.4	1.9	+0.5	
계	2.5	40.1	+37.6	

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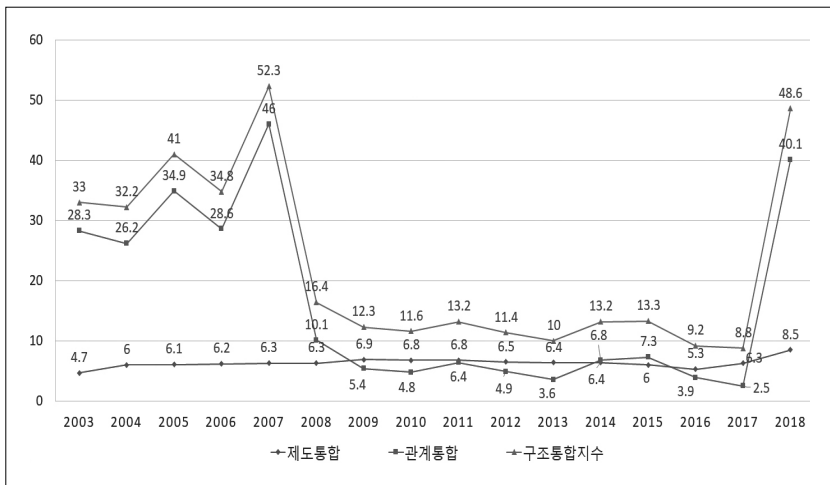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2-38〉와 같다.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1.0	1.0	0	0	0.8	0	0	0	0	1.8	4	0.5	9.1	0
1990	0	0	1.0	2.2	6	0	0.4	0	0.5	2.5	0	1.7	4	1.0	19.3	1
1991	0	0	1.0	2.0	4	0	0.2	0	1.1	2.5	0.4	1.7	4	1.1	18	1
1992	0	0	2.0	15.4	6	0	0	0	14.3	2.5	0.4	1.6	2	1.1	45.3	3
1993	0	0	2.5	0.8	0	0	0	0	0	0	0.6	1.4	3	1.1	9.4	0
1994	0	0	2.6	2.0	0	0	0	0	1	0	0.2	1.4	3	1.1	11.3	1
1995	0	0	3.1	0.0	0	0	0	0	0.5	0	0	1.4	3.5	1.2	9.7	0
1996	0	0	3.2	0.0	0	0	0	0	0	0	0.7	1.0	1	1.2	7.1	0
1997	0	0	3.3	0.0	0	0	0	0	0	0	3.7	0.4	2.5	1.2	11.1	1
1998	0	0	3.8	0.4	0	0	0	0	0	0	2.2	0.3	3.5	1.2	11.4	1
1999	0	0	4.3	0.6	1.6	0	0.2	0	0.5	0	2.5	0.3	1.5	1.3	12.8	1
2000	0	0	4.4	2.6	11	3.2	0.6	0	11	2.5	0.7	0.3	4	1.3	41.6	3
2001	0	0	4.5	0.0	3	0.8	0.4	0	6.3	2.5	0.5	0.3	4	1.3	23.6	2
2002	0	0	4.6	0.4	3	3.6	0.6	0	7.2	2.5	0.5	0.3	2	1.8	26.5	2
2003	0	0	4.7	0.2	6	2.4	0.4	0	7.2	5	1.0	0.3	4	1.8	33	2
2004	0	0	6	0.0	3	3.2	1.2	0	7.1	2.5	2.5	0.3	4.5	1.9	32.2	2
2005	0	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	2.4	41	3
2006	0	0	6.2	0.6	3	2.8	2.6	2.5	6.8	2.5	1.0	0.4	4	2.4	34.8	2
2007	0	0	6.3	1.8	1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
2008	0	0	6.3	0	0	0.8	0	0	3	0	1.5	0.4	2	2.4	16.4	1
2009	0	0.5	6.4	0.8	0	0	0.2	0	0.3	0	0	0.2	1.5	2.4	12.3	1
2010	0	1.0	5.8	0	0	0.8	0.2	0	0	0	0	0.4	1	2.4	11.6	1
2011	0	1.0	5.8	0	0	0.4	0	0	0	0	1.2	0.4	2.5	1.9	13.2	1
2012	0	1.0	5.5	0	0	0	0	0	0	0	0	0.5	2.5	1.9	11.4	1
2013	0	0.5	5.9	0.2	0	0	0	0	0	0	0	0.5	1.0	1.9	10.0	0
2014	0	0.5	5.9	0.2	1.5	0.4	0	0	0.3	0	0	0.5	2	1.9	13.2	1
2015	0	0.5	5.5	0	2.3	0	0	0	0.6	0	0	0.5	2	1.9	13.3	1
2016	0	0.5	4.8	0	0	0	0	0	0	0	0	0	2	1.9	9.2	0
2017	0	0.5	5.8	0	0	0	0	0	0	0	0	0.1	1	1.4	8.8	0
2018	0	1.5	7	1.4	20	3.4	0	0	4.8	2.5	0	0.1	6	1.9	48.6	3

- 2018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48.6점으로 전년에 비해 39.8점이 증가했다. 통합단계는 41~60점 사이인 3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은 2.2점 증가하였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문은 37.6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39.8점이 증가하였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으로의 전환등이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1.5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동법제화 수준은 전년 대비 1.2점 증가하여 7점이다.
- 관계통합 부문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차원의 회담이 재개되었고, 각종 회담 부분에서 다양한 합의문과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선순환적 조치들이 이어졌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분은 다양한 긴장완화, 평화 구축 노력으로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어 6점이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개선되어 1.9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점-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 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 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 · 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 · 제도화 · 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단일화의 영역은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18년에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18년에는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언어, 방송통신기술, 사회복지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하려는 조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의 경우 남한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⁸⁾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⁹⁾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퓨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기록하지만 1인당 복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2018년 기준 99.9%로 추정된다.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발표자료에 따르면 62.9%에 이른다. 따라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용률 81.4%으로 해당하는 점수는 2.0점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2.0점이다.

□ 한편 민간 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언어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겨레말큰사전 편찬 공정률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56.7%를 기록하여 절반을 넘어섰다.¹⁰⁾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 공동회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에 재개되어 2015년 5월 5일~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와 집필회의를 하였다.¹¹⁾ 2015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제25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076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9,799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¹²⁾ 2015년 회의 이후 남북공동회의는 중단되었으나,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78.5%의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¹³⁾ 따라서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에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7.9점이다.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변수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간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18년 6월에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계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5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3.6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18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2점이다.

8) 고영태,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년 2월 11일. <<http://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10) 이성규, “남북경색으로 ‘겨레말큰사전’사업 차질”, 「연합뉴스」, 2011년 5월 2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7/0200000000AKR20110527043000002.HTML?did=1179m>)

11)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5~11일 중 선양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5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5/0200000000AKR20150505049400043.HTML?input=1179m>)

12)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중 다롄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51201061900014>)

13) 2019년 통일백서 p.144.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5	2.7	6.2/1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5	1.7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축력	3.6	1.8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4.4	5.1	5.1	6.0	5.2	5.5	5.3	5.5	5.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2	3.4	3.3	3.8	3.8	3.3	3.3	3.6	3.5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축력	3.8	3.1	3.1	3.4	3.7	2.8	2.9	3.6	3.6
평균	3.8	3.9	3.8	4.4	4.2	3.9	3.8	4.2	4.2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 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18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결과¹⁴⁾』를 보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

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67.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18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6.2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8.7점으로 2017년보다 0.1점 감소하였다.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구분 연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합계)
1989	0	1.1	1.1
1990	0	1.1	1.1
1991	0	1.1	1.1
1992	0	1.3	1.3

1993	0	1.5	1.5
1994	0	1.6	1.6
1995	0	1.9	1.9
1996	0	2.2	2.2
1997	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2015	2.5	5.8	8.3
2016	2.5	5.9	8.4
2017	2.5	6.3	8.8
2018	2.5	6.2	8.7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의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2018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8.6점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6점 증가하였다.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30)	제도 단일화(30)	남북한 법제화	제도적 통합지수(합계)
1989	0	0	1.1	1.1
1990	0	0	1.1	1.1
1991	0	0	1.1	1.1
1992	0	0	1.3	1.3
1993	0	0	1.5	1.5
1994	0	0	1.6	1.6
1995	0	0	1.9	1.9
1996	0	0	2.2	2.2
1997	0	0	3.2	3.2
1998	0	0	6.9	6.9
1999	0	0	7.0	7.0
2000	0	0	7.1	7.1
2001	0	0	7.2	7.2
2002	0	0	7.2	7.2
2003	0	0	7.4	7.4
2004	0	0	7.5	7.5
2005	0	0.9	7.5	8.4
2006	0	1.7	7.5	9.2
2007	0	2.6	9.1	11.7
2008	0	3.5	9.1	12.6
2009	0	5.0	9.2	14.2
2010	0	5.7	8.2	13.9
2011	0	5.7	8.3	14.0
2012	0	5.7	8.3	14.0
2013	0	5.7	9.1	14.8
2014	0	7.7	8.9	16.6
2015	0	7.2	8.3	15.5
2016	0	7.2	8.4	15.6
2017	0	7.2	8.8	16.0
2018	0	9.9	8.7	18.6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의의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8년 인적왕래는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총 인원은 6,689명이다.

- 2009년 이후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18년에는 809명이다.
- 이상의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인원(가중치)을 부여한 결과, 방북 6,689명+방남 809명(X2)=8,307명이 된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¹⁵⁾
- 2018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8,307명으로 2017년에 비해 대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상대점수가 0점인 이유는 기준점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지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이산가족 (A)	교육학술 (B)	문화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출판 (G)	대북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점수
1989										1	0	0
1990										1,056	0	0
1991										762	0	0
1992										566	0	0
1993										36	0	0
1994										12	0	0
1995										536	0	0
1996										146	0	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	0

15) 본 수치에 활용하던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출판이 2017년 7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분야별로 표기하던 방북인원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고 총 인원 수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08	148,652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2,247	214,684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285	59,214	0.9	0.2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347	90,843	1.3	0.2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3,922	78,644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6,223	272,147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153	312,056	4.5	0.9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8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45,006	369,220	5.3	1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	
방남 63명(가중치 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620	0.02	0	
방남 0명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 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33	232	0	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74	292	0	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 x2점)												
2014	760	100	6	0	186	0	63	33	1,880	0.03	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 x2점)												
2015	1,491	840	15	100	354	0	295	43	3,138	0.04	0	
방남 0명												
2016	방북 0명									0	0	0
방남 0명												
2017	방북 52명									178	0	0
방남 63명 (사회문화 63명 가중치 x2점)												
2018	방북 6,689명									8,307	0.1	0
방남 809명 (사회문화 809명 가중치 x2점)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합계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함

**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음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음

**** 2017년부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또한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 되어 있음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2) 공동 행사(교류협력사업)

-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는 방문 성사 1건당 1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되, 인적왕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한방문의 경우에는 건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8년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는 방북 행사는 문화·예술 부문 1건, 체육 1건으로 나타났고 방남의 경우 체육 1건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방북 행사 건수와 방남 행사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은 4점이다.
- 연간 남북공동행사의 개최 건수의 기준점은 600건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공동행사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2018년 공동행사 변인의 총점은 4점으로 전년 보다 4점이 높으며, 기준점 대비 비율은 0.7%이다. 최종적으로 상대점수로 전환했을 경우 2018년 공동행사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1점이다.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89	0	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0
1991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1	0	0	3	3	7	1.2	0.2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98	6	6	0	10	10	32	5.3	1	
1999	1	7	65	9	2	84	14	2.8	
2000	2	9	51	9	12	83	13.8	2.8	
2001	13	10	39	11	11	84	14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6	
2003	24	11	24	22	21	102	17	3.4	
2004	19	12	6	24	21	82	13.7	2.8	
2005	32	19	29	68	75	223	37.2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2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2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4	
2009	9	0	2	15	0	(26)	36	6	1.1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0	8	0	1	15	3	(27)	27	4.5	0.9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	0.8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2012	0	1	0	8	1	(10)	10	1.7	0.3
	방남 0건					(0)			
2013	1	0	1	3	0	(4)	8	1.3	0.2
	방남 2건(가중치 x2점)*					(4)			
2014	8	2	0	12	0	(22)	32	5.3	1.0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5	0	0	0	0	0	0	0	0	0
	방남 5건(가중치 x2점)*								
2016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0	1	1	0	0	2	4	0.7	0.1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3)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

- 2018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¹⁶⁾은 인적왕래지원에 24억 9600만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74억 8,1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50억 9,7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26억 6,100만원으로 총 177억 3,500만원이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⁷⁾, 2018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약 1781.1조원으로 2018년 대비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0.000996% 수준에 불과하다.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0.1%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18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비율은 0.825%로 2017년 0.292%에 비해 0.533%p 상승하였다. 최종적으로 2018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16) 통일부, “2018년 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37&call_from=rsslink

17) 한국은행,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0384&menuNo=20069>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1,824	0.03	25.0	3
1996	55	0.001	0.8	0
1997	191	0.003	2.5	0.6
1998	199	0.003	2.5	0.6
1999	343	0.005	4.2	0.8
2000	1,896	0.03	25.0	3
2001	1,182	0.02	16.7	3.4
2002	2,450	0.04	33.3	6.6
2003	3,110	0.05	41.7	8.4
2004	2,319	0.04	33.3	6.6
2005	3,904	0.06	50.0	10
2006	2,391	0.04	33.3	6.6
2007	4,032	0.06	50.0	10
2008	845	0.005	4.2	0.8
2009	345	0.003	2.5	0.6
2010	233	0.002	1.7	0.3
2011	129	0.001	0.8	0
2012	52	0.0002	0.2	0
2013	174	0.0012	1.0	0
2014	212	0.0015	1.3	0
2015	133	0.00088	0.7	0
2016	46	0.00027	0.225	0
2017	58	0.00035	0.292	0
2018	177	0.00099	0.825	0

※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통계, 한국은행의 2018년 국민계정(잠정)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18년 이산가족 상봉 수는 834명으로 상대점수(10점 만점)는 0.6점이다.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	0
1990	0	0	0
1991	0	0	0
1992	0	0	0
1993	0	0	0
1994	0	0	0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0.01	0
1999	5	0.04	0
2000	348	2.7	0.3
2001	296	2.3	0.2
2002	1,479	11.4	1
2003	233	1.8	0.2
2004	1,624	12.5	1.2
2005	239	1.8	0.2
2006	2,127	16.4	1.6
2007	3,207	24.7	2.5
2008	2,267	17.4	1.7
2009	1,449	11.1	1.1

연도	구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2010		754	5.8	0.6
2011		0	0	0
2012		1	0.01	0
2013		0	0	0
2014		760	5.8	0.6
2015		976	7.5	0.8
2016		0	0	0
2017		0	0	0
2018		834	6.4	0.6

※ 출처 : 통일부, 『월간 이산가족현황』 각 해당 연호¹⁸⁾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기존의 관광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자 입국 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중치(×2)를 부여한다.
- 2018년 남북 인적교류는 7,498명으로 전년의 115명 대비 7,383명이나 증가 하였으며 남북화물 물동량은 전년 0톤에서 9천톤이나 증가하였다.

18)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_exc.do?mid=SM00000129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그해 11월에 개성관광마저 중단된 이후 2009년에서 2018년 10년간 연속 0명이다.
- 탈북자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8년에는 1,137명이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인원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018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17년과 동일하게 0점이다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자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	0
1990		0	-	-	-	-	0	0
1991		0	-	-	-	-	0	0
1992		0	-	-	-	-	0	0
1993		0	-	-	-	-	0	0
1994		0	-	-	-	-	0	0
1995		0	-	-	-	-	0	0
1996		0	-	-	-	-	0	0
1997		0	-	-	-	-	0	0
1998		10,554	2,193	0	-	12,747	0	0
1999		148,008	2,288	0	-	150,296	0	0
2000		212,247	2,800	15	-	215,062	0	0
2001		57,285	1,162	19	-	58,466	0	0
2002		84,347	2,762	115	1,142	88,366	1.3	0.2
2003		73,922	5,208	82	1,285	80,497	1.2	0.2
2004		266,223	18,250	120	1,898	286,491	4.1	0.8
2005		301,153	69,682	50	1,384	372,269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32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206	6.9	1.3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2,939	6.9	1.3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3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33	120,128	0	1,502	121,664	1.7	0.3
2013	74	75,990	0	1,514	77,578	1.1	0.2
2014	33	126,014	0	1,397	127,444	1.8	0.3
2015	0	128,566	0	1,276	129,842	1.9	0.3
2016	0	14,786	0	1,418	16,204	0	0
2017	0	52	63	1,127	1,242	0	0
2018	0	6,689	809	1,137	8,635	0	0

* 북한의 남한방문은 x2점 가중치 부여

** 2017년 8월 이후 「월간 남북교류협약동향」의 폐간으로 분야별 방문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 2018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08년 이후 10년 연속 8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 (예: KBS의 '남북의 창' 등)	1
1990	"	1
1991	"	1
1992	"	1
1993	"	1
1994	"	1
1995	"	1
1996	"	1
1997	"	1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3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합의	8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2013	"	8
2014	"	8
2015	"	8
2016	"	8
2017	"	8
2018	"	8

7)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에도 국제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는 없으나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다. 그 외에도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4.28~5.6) 탁구여자단체전 단일팀을 구성된 바 있으며 대전에서 개최된 「2018 코리아 오픈국제탁구대회」(7.17~7.22)에서는 여자 복식 단일팀, 남자 복식 단일팀, 혼합복식 단일팀을, 8월에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는 남북 공동입장, 여자농구 단일팀, 남자 카누 단일팀, 여자 카누 단일팀, 여자 용선 단일팀, 남자 용선 단일팀, 남자 조정 8인승 단일팀, 남자 조종 4인승 단일팀, 여자 조정 2인승 등 여러 단일팀이 구성된 바 있다. 가을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9.20~9.27) 혼성단체전 남북 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6~10.13)에서는 남북 공

동입장, 남자 탁구 단체전 단일팀, 남자 수영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이어 「2018 스웨덴오픈국제탁구대회」(10.29~11.4)에서 남자복식(2팀) 단일팀, 여자복식(2팀) 단일팀 구성, 「2018 오스트리아오픈국제 탁구대회」(11.6~11.11)에서는 남자복식(1팀) 단일팀, 여자복식(1팀) 단일팀, 혼합복식(1팀)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 점수 산출방법은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선수권대회 등)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 구성 또는 공동 입장할 경우를 연평균 20회를 기준(20점)으로 하여 1회에 1점씩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20회 이상이 되더라도 상한점수인 2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2018년 단일팀·공동입장 부문에서는 11회로 기록되어 11점이 부여되었다.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2	2	2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1	1	1
2001	0	0	0	0
2002	0	0	0	0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 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2003	0	0	0	0
2004	0	1	1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0	0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0	0
2015	0	0	0	0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0	11	24	20

※ 자료출처 :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참조

8)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의 산출방식은 “회담 수+합의서 채택수×2+공동보도문×1.5”이다.

□ 2018년 사회문화분야의 당국자 회담 총점은 17.5점이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18년 당국자 간 회담 상대점수는 7.3이다.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	0	0	0	0	9	37.5	3.8
1990	7	0	0	0	0	7	29.2	3
1991	7	4	8	0	0	15	62.5	6.3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2	1	2	0	0	4	16.7	1.7
2003	1	1	2	0	0	3	12.5	1.3
2004	1	1	2	0	0	3	12.5	1.3
2005	6	2	4	1	1.5	11.5	47.9	4.8
2006	3	0	0	0	0	3	12.5	1.3
2007	6	0	0	3	4.5	10.5	43.8	4.4
2008	1	1	2	0	0	3	12.5	1.3
2009	2	1	2	0	0	4	16.7	1.7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2010	4	1	2	0	0	6	25	2.5
2011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2013	1	1	2	0	0	3	12.5	1.3
2014	2	0	0	0	0	2	8.3	0.9
2015	1	1	2	0	0	3	12.5	1.3
2016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2018	7	0	0	7	10.5	17.5	72.9	7.3

* 출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 최종적으로, 2018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상대점수는 10점이다.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89	3.8	0	0	3.8
1990	3	0	0	3
1991	6.3	0	0	6.3
1992	0	10	5*	15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7	0	0	1.7
2003	1.3	0	0	1.3
2004	1.3	0	0	1.3
2005	4.8	0	0	4.8
2006	1.3	0	0	1.3
2007	4.4	10	0	14.4
2008	1.3	10	0	11.3
2009	1.7	10	0	11.7
2010	2.5	10	0	12.5
2011	0	10	0	10
2012	0	10	0	10
2013	1.3	10	0	11.3
2014	0.9	10	0	10.9
2015	1.3	10	0	11.3
2016	0	10	0	10
2017	0	10	0	10
2018	7.3	10	0	17.3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월~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라. 종합

- 최종적으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5.9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37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1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52.9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3단계(41~70점)에 해당된다. 3단계는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가 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 2018년 구조통합지수는 2017년 34점에 비해 18.9점 상승하였다.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 례 화 (30)		
1989	0	0	1.1	0	0	0	0	0	1	0	3.8	5.9	0단계
1990	0	0	1.1	0	0	0	0	0	1	0	3	5.1	0단계
1991	0	0	1.1	0	0	0	0	0	1	2	6.3	10.4	0단계
1992	0	0	1.3	0	0	0	0	0	1	0	15	17.3	1단계
1993	0	0	1.5	0	0	0	0	0	1	0	0	2.5	0단계
1994	0	0	1.6	0	0	0	0	0	1	0	0	2.6	0단계
1995	0	0	1.9	0	0	3	0	0	1	0	0	5.9	0단계
1996	0	0	2.2	0	0	0	0	0	1	0	0	3.2	0단계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 례 화 (30)		
1997	0	0	3.2	0	0.2	0.6	0	0	1	0	0	5.0	0단계
1998	0	0	6.9	0	1	0.6	0	0	3	0	0	11.5	1단계
1999	0	0	7.0	0.4	2.8	0.8	0	0	3	0	0	14	1단계
2000	0	0	7.1	0.6	2.8	3	0.3	0	5	1	0	19.8	1단계
2001	0	0	7.2	0.2	2.8	3.4	0.2	0	5	0	0	18.8	1단계
2002	0	0	7.2	0.2	3.6	6.6	1	0	5	0	1.7	25.3	2단계
2003	0	0	7.4	0.2	3.4	8.4	0.2	0	5	0	1.3	25.9	2단계
2004	0	0	7.5	0.8	2.8	6.6	1.2	0.8	5	1	1.3	27.0	2단계
2005	0	0.9	7.5	0.9	7.4	10	0.2	1.1	6	0	4.8	38.8	2단계
2006	0	1.7	7.5	0.8	7.2	6.6	1.5	0.9	6	0	1.3	33.5	2단계
2007	0	2.6	9.1	1	12	10	2.5	1.4	6	0	14.4	59.0	3단계
2008	0	3.5	9.1	0.9	6.4	0.8	1.7	1.4	8	0	11.3	43.1	3단계
2009	0	5	9.2	0	1.1	0.6	1.1	0.3	8	0	11.7	37.0	2단계
2010	0	5.7	8.2	0	0.9	0.3	0.6	0.3	8	0	12.5	36.6	2단계
2011	0	5.7	8.3	0	0.8	0	0	0.3	8	0	10	33.1	2단계
2012	0	5.7	8.3	0	0.3	0	0	0.3	8	0	10	32.6	2단계
2013	0	5.7	9.1	0	0.2	0	0	0.4	8	0	11.3	34.7	2단계
2014	0	7.7	8.9	0	1.0	0	0.6	0.5	8	0	10.9	37.6	2단계
2015	0	7.2	8.3	0	0	0	0.8	0.3	8	0	11.3	35.9	2단계
2016	0	7.2	8.4	0	0	0	0	0	8	0	10	33.6	2단계
2017	0	7.2	8.8	0	0	0	0	0	8	0	10	34.0	2단계
2018	0	7.2	8.7	0	0.1	0	0.6	0	8	11	17.3	52.9	3단계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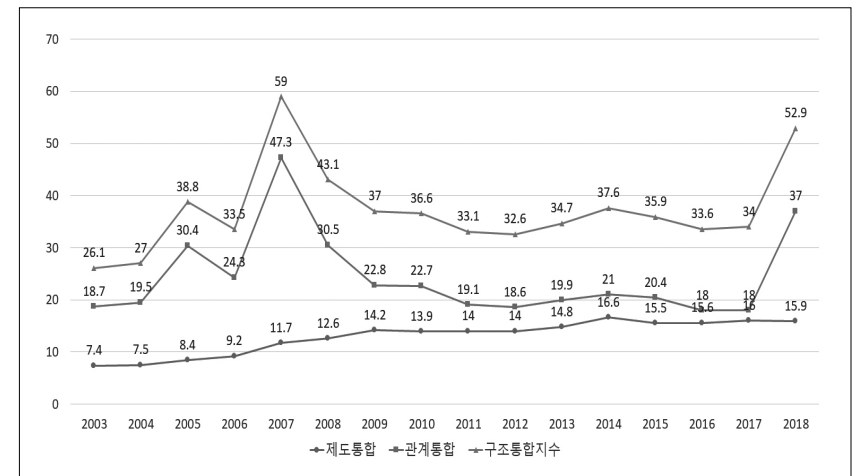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	5.1
1991	1.1	9.3	10.4
1992	1.3	16	17.3
1993	1.5	1	2.5
1994	1.6	1	2.6
1995	1.9	4	5.9
1996	2.2	1	3.2
1997	3.2	1.8	5.0
1998	6.9	4.6	11.5
1999	7.0	7.4	14.4
2000	7.1	13.3	20.4
2001	7.2	11.6	18.8
2002	7.2	18.3	25.5
2003	7.4	18.7	26.1
2004	7.5	19.5	27.0
2005	8.4	30.4	38.8
2006	9.2	24.3	33.5
2007	11.7	47.3	59.0
2008	12.6	30.5	43.1
2009	14.2	22.8	37.0
2010	13.9	22.7	36.6
2011	14.0	19.1	33.1
2012	14.0	18.6	32.6
2013	14.8	19.9	34.7
2014	16.6	21.0	37.6
2015	15.5	20.4	35.9
2016	15.6	18.0	33.6
2017	16.0	18.0	34.0
2018	15.9	37	52.9

〈표 2-59〉 2018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통합영역	지표	2017년	2018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단일 제도화	7.2	7.2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 변화없음
	공동 법제화	8.8	8.7	-0.1	전문가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 약간 감소함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공동행사	0	0.1	+0.1	공동행사가 조금 증가하였음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집행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	0.6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짐
	인적 이동의 자유화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언론방송의 자유화	8	8		전년대비 변화 없음
	국제대회 공동 개최, 단일팀 구성	0	11	+1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짐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0	17.3	+7.3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짐
	계	34	52.9	+18.9	전년대비 상승

〈그림 2-4〉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250점이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하기 때문이다.
-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 영역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경제 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영역	변인	배점	
경제 영역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사회 문화 영역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 7월 3일~7월 28일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8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고,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19년에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16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북한사회변동 2019”의 자료이다.¹⁹⁾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총 11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19)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9년 11월 4일) 참조. 이 조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의 준거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지의 준거 시점은 2018년이다.

□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의 조사부터는 직전 연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19년의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16명 모두는 2018년 1월 ~12월까지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은 2018년 57.7%으로 전년대비 5.6%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50% 초반을 기록하였던 데에서 크게 반등한 것이며, 2010년대 들어 최고치이다.

□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 역시 26.7%를 기록하여 2017년 23.9%에 비해 2.8%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 하락한데에서 반등하여 2014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의 추세는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 비해 1/2 수준의 긍정 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그 추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정리하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2년간의 하락세를 딛고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며, 상대점수는 8.4점이다.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택	48.6	7.0/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1.8	
2014	"	55.5	8.2/20
	"	26.7	

2015	”	57.4	8.5/20
	”	28.0	
2016	”	53.0	7.8/20
	”	24.6	
2017	”	52.1	7.6/20
	”	23.9	
2018	”	57.7	8.4/20
	”	26.7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 본 항목은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2017년 이후 조사에서는 각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 정책이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18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1.3%로 2017년 62.5%에서 8.8% 증가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9%로 전년대비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점수 역시 5.3점에서 6.3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 이는 2018년 남북 간 긴장이 극적으로 완화되면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1.8	5.4/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46.3	
2014	”	62.2	5.5/10
	”	46.9	
2015	”	65.4	5.8/10
	”	50.3	
2016	”	52.5	4.7/10
	”	41.8	
2017	질문: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62.5	5.3/10
	질문: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43.3	
2018	”	71.3	6.3/10
	”	54.9	

다)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

-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통일의식조사에서 다른 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본 항목을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다.
- 2013년부터 본 항목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의 여부”에 관한 질문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여 왔다.

○ 그러나 2016년에는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대체되었으며, 뒤이어 2017년에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18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4.2점으로 2017년보다 0.5점 증가하였다. 2018년 들어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등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변화가 감지되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경험 등 대북 관여정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27.4	2.7/10
2014	“ ”	32.8	3.3/10
2015	“ ”	32.5	3.3/10
2016	질문: (1) 상동, (2)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4.2	3.4/10

2017	질문: (1)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상동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7.1	3.7/10
2018	“ ”	41.5	4.2/10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2018년 72.4%로 전년대비 12.6% point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저점을 기록한 뒤 2018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을 선택한 비율은 21.6%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20% 안팎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체제 평가 및 시장경제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7년의 5.9점에서 2018년 7.1점으로 1.2점 상승하였다.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에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응답: “자본주의 지지” 선택	75.1	7.0/15
	질문: “귀하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 선택	18.1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4	"	76.6	7.9/15
	"	28.7	
2015	"	75.9	7.3/15
	"	21.3	
2016	"	72.0	6.9/15
	"	19.7	
2017	"	59.8	5.9/15
	"	19.5	
2017	"	72.4	7.1/15
	"	21.6	

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우호도

- ‘남한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평가’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남한의 대북 지원 여부를 북한주민이 알고 있냐’는 설문에서는 47.4%가 있다고 답해 전년 56.3%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2014년 71.3%를 기록한 후 2017년 소폭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반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7년 65.5%에서 2018년 67.2%로 소폭 상승하였다. 남북 경제교류의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종합하면,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의 하락이 대북 지원에 대한 상대점수 하락을 주도하여 전년보다 0.5점 하락한 8.6점을 기록하였다.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 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2.4	10.2/15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73.0	
2014	"	71.3	10.9/15
	"	74.6	
2015	"	63.0	10.4/15
	"	75.0	
2016	"	53.1	9.5/15
	"	74.2	
2017	"	56.3	9.1/15
	"	65.5	
2018	"	47.4	8.6/15
	"	67.2	

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

-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11년 첫 조사 이래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 왔다. 2018년 조사에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66.4%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여 2017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악화되는 원인은 2010년 이후 남한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반 북한 시민들에게 그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에 대북투자 우호도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7년보다 0.1점 하락한 6.6 점을 기록하였다.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85.2	8.5/10
2014	"	76.3	7.6/10
2015	"	73.1	7.3/10
2016	"	70.4	7.0/10
2017	"	66.7	6.7/10
2018	"	66.4	6.6/10

3) 종합

□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면, 경제 부문 점수는 2015년까지 40점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과 2017년 30점대로 내려앉은 후 2018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40점대를 회복하였다.

○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15.1점 → 2014년 17.0점 → 2015년 17.6점 → 2016년 15.9점 → 2017년 16.6점 → 2018년 18.9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그에 따른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을 보여 온 데다 현 정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평화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강조한 것이 경제 교류 재개와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점수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띠고 소폭 반등하였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 → 2015년 25.0점 → 2016년 23.4점 → 2017년 21.7점 → 2018년 22.3점으로 2015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1점대 까지 내려갔으나 2018년에는 더 이상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복세를 보였다.

○ 2018년 조사에서는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된 데다가 경제 단독 노선으로의 전환 선언으로 인해 경제 개혁에 대한 내부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이상을 종합하면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7년 38.3점에서 2018년 41.2점으로 2.9점 상승하였다.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3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15.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5.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2014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20	17.0/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9/15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9/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10	
총점			43.4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5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5/20	17.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8/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3/15	25.0/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4/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3/10	
총점			42.6	
2016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5.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4.7/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3.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5/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10	
총점			39.3	
2017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6/20	16.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5.9/15	21.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7/10	
총점			38.3	
2018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4/20	18.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2/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1/15	22.3/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8.6/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6/10	
총점			41.2	

나. 정치

□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18년 남한주민은 59.7%, 북한주민은 93.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6.0점, 9.3점으로 총 15.3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 2014년 15.4점, 2015년 14.5점, 2016년 15.1점 2017년 14.9점을 기록하였다.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6	5.2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9.0	5.9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5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98.3	9.8
2015	남한주민	"	51.0	5.1
	북한주민		93.5	9.4
2016	남한주민	"	53.4	5.3
	북한주민		97.8	9.8
2017	남한주민	"	54.1	5.4
	북한주민		95.4	9.5
2018	남한주민	"	59.7	6.0
	북한주민		93.1	9.3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에게 남북한 간 선거제도 차이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

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6%였고, 북한주민은 2.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7점, 0.3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1.0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점, 2014년 1.2점, 2015년 1.4점, 2016년 1.1점, 2017년 1.1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치이다.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7	4.9	5.3	0.5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4.2	4.2	4.2	0.4
	북한주민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2	11.3	8.8	0.9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6.1	-	6.1	0.6
	북한주민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2.3	-	2.3	0.2
2013	남한주민	"	8.6	-	8.6	0.9
	북한주민		9.0	-	9.0	0.9
2014	남한주민	"	9.0	-	9.0	0.9
	북한주민		2.5	-	2.5	0.3
2015	남한주민	"	6.7	-	6.7	0.7
	북한주민		6.5	-	6.5	0.7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16	남한주민	"	7.6	-	7.6	0.8
	북한주민	"	3.0	-	3.0	0.3
2017	남한주민	"	8.4	-	8.4	0.8
	북한주민	"	3.4	-	3.4	0.3
2018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	2.6	-	2.6	0.3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43.9%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53.4%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4.4점, 5.3점으로 총 9.7점이 된다. 이 부문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 2014년 7.7점, 2015년 7.3점, 2016년 8.1점, 2017년 7.3점으로 전년 대비 2.4점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47.8	4.8
	북한주민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2015	남한주민	"	29.5	3.0
	북한주민		42.6	4.3
2016	남한주민	"	33.9	3.4
	북한주민		46.9	4.7
2017	남한주민	"	28.8	2.9
	북한주민		43.6	4.4
2018	남한주민	"	43.9	4.4
	북한주민		53.4	5.3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71.8%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56.0%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북한이 각각 3.6점, 2.8점으로 총 6.4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8점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0.5점 감소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 2014년 6.3점, 2015년 5.8점, 2016년 5.9점, 2017년 6.1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0.3점 증가했다.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79.5	4.0
	북한주민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68.1	3.4
2015	남한주민	"	52.5	2.6
	북한주민		64.9	3.2
2016	남한주민	"	55.3	2.8
	북한주민		62.1	3.1
2017	남한주민	"	55.7	2.8
	북한주민		65.5	3.3
2018	남한주민	"	71.8	3.6
	북한주민		56.0	2.8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68.8%), 주체사상(81.9%), 천리마운동(82.5%), 고난의 행군(71.8%), 장마당(70.7%), 모란봉악단(92.5%)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

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8.0%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69.8%), 5.18 광주항쟁(85.3%), 88서울올림픽(63.0%), 2002 월드컵(55.2%), 세월호 사건(68.1%), 개성공업지구 운영(91.3%)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2.1%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47.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평균 인지도는 59.8%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3.9점, 북한의 경우 3.0점으로 총 6.9점이 된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 2014년 3.1점, 2015년 3.5점, 2016년 3.5점, 2017년 3.9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 2012년 3.5점, 2013년 3.2점, 2014년 3.6점, 2015년 3.5점, 2016년 3.2점, 2017년 3.4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감소하였다. 종합인지도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 2014년 6.7점, 2015년 7.0점, 2016년 6.7점, 2017년 6.9점으로 2018년은 전년과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8.6	2.9
	북한주민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2.8	2.6
	북한주민		70.8	3.5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쇄고기수입반대 촛불 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0.6	3.0
	북한주민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2015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6	3.5
	북한주민		70.3	3.5
2016*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2	3.5
	북한주민		62.9	3.2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7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4	3.5
	북한주민		68.4	3.4
201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78.4	3.9
	북한주민		59.8	3.0

*2011년 북한주민 점수 수정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2016년 남한주민 질문 수정 (아리랑축전 삭제, 모란봉악단 추가)

2) 종합

-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18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0점 만점에 39.3점이다.
- 2018년의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17년과 비교하면 3.0점 상승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만이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은 2017년에 비하여 각각 0.4점, 2.4점, 0.7점,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와 같았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영역 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4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6년에는 남북한의 정치통합의식이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0.6점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3.0점)하였다.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5	3.8/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5	3.5/5	6.1/10
	총점	15.7/40	23.1/40	39.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5	3.0/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4/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5	3.5/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5	3.5/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5	3.8/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5/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2015	통일의 필요성	5.1/10	9.4/10	14.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7/10	1.4/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0/10	4.3/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6/5	3.2/5	5.8/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5/5	7.0/10
	총점	14.9/40	21.1/40	36.0/80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6	통일의 필요성	5.3/10	9.8/10	15.1/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4.7/10	8.1/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1/5	5.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2/5	6.7/10
	총점	15.8/40	21.1/40	36.9/80
2017	통일의 필요성	5.4/10	9.5/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0/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9/10	4.4/10	8.8/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4/5	7.3/10
	총점	15.4/40	20.9/40	36.3/80
2018	통일의 필요성	6.0/10	9.3/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3/10	1.0/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4/10	5.3/10	9.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6/10	2.8/10	6.4/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10	3.0/10	6.9/20
	총점	18.6/40	20.7/40	39.3/80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의 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 주민은 20.6%, 북한주민은 91.4%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0점, 북한주민의 경우 4.6점이 부여된다.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를 접해 보았다는 응답이 8.7% 정도 줄어든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9.8% 늘어난 수치를 보인다.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31.2	1.6
	북한주민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 선택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85.9	4.3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87.7	4.4
2015	남한주민	"	23.2	1.2
	북한주민		87.0	4.4
2016	남한주민	"	21.6	1.1
	북한주민		86.4	4.3
2017	남한주민	"	31.2	1.5
	북한주민		81.6	4.1
2018	남한주민	"	20.6	1.0
	북한주민		91.4	4.6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2일) 참조.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력갱생의 명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9년 11월 4일) 참조.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하였다.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2018년의 경우 남한 주민은 27.5% 북한주민은 94.4%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2.8점, 북한주민의 경우 9.4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에 4.0점에서 2013년 4.2점, 그리고 2014년 4.3점, 2015년 4.6점에서 2016년 2.9점으로 하락하였고 2017년 2.6점으로 재차 하락하였지만 2018년 2.8점으로 소폭 반등하였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 8.9점, 2013년 8.0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9.0점으로 다소 상승한 뒤, 201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상승하다 2018년 약간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남북한 상호 수용의식의 격차는 6.6포인트로 나타났다.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2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2010	남한주민	"	42.5	4.3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9	4.1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0	9.0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39.5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1	8.9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	4.2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79.9	8.0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5	4.3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2	9.0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5.9	4.6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8	9.0
2016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29.0	2.9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2.4	9.2
2017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4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5.9	9.6
2018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27.5	2.8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4.4	9.4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의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2일) 참조.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력갱생의 명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9년 11월 4일) 참조.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남한 주민은 10.3%, 북한주민은 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인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9.7%에 대한 상대점수는 9.0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70.7%에 대한 상대점수는 7.1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줄어든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역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5.3	94.7	9.5
	북한주민	응답: “적대대상” 선택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9.0	91.0	9.1
	북한주민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12.0	88.0	8.8
	북한주민		15.5	84.5	8.5
2011	남한주민	"	16.8	83.2	8.3
	북한주민		15.4	84.6	8.5
2012	남한주민	"	10.9	89.1	8.9
	북한주민		12.8	87.2	8.7
2013	남한주민	"	16.4	83.6	8.4
	북한주민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13.9	86.1	8.6
	북한주민		15.6	84.4	8.4
2015	남한주민	"	16.5	83.5	8.4
	북한주민		22.2	77.8	7.8
2016	남한주민	"	16.2	83.8	8.4
	북한주민		23.5	76.5	7.7
2017	남한주민	"	12.3	87.7	8.7
	북한주민		28.7	71.3	7.1
2018	남한주민	"	10.3	89.7	9.0
	북한주민		29.3	70.7	7.1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의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2일) 참조.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력갱생의 명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9년 11월 4일) 참조.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주민은 20.0% 북한주민은 12.5%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2.0점, 북한주민의 경우 1.3점이 부여된다.
- 앞서 살펴 본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경험 정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이 동질감의 확인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 주민	질문1: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1: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5	17.6	17.6	1.8
	북한 주민	질문2: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2: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주민	"	7.2	11.8	9.5	1.0
	북한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주민	"	10.8	13.3	12.05	1.2
	북한주민		5.8	4.8	5.3	0.5

2011	남한주민	"	9.1	11.6	10.4	1.0
	북한주민		2.3	11.6	7.0	0.7
2012	남한주민	"	11.8	14.3	13.0	1.3
	북한주민		5.3	10.5	7.9	0.8
2013	남한주민	"	14.7	14.2	14.45	1.5
	북한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주민	"	16.4	16.7	16.55	1.7
	북한주민		6.6	14.7	10.65	1.1
2015	남한주민	"	4.2	27.4	15.8	1.6
	북한주민		5.6	12.0	8.8	0.9
2016	남한주민	"	18.7	22.2	20.45	2.0
	북한주민		4.5	4.8	4.65	0.4
2017	남한주민	"	13.6	16.2	14.9	1.5
	북한주민		13.8	13.7	13.8	1.4
2018	남한주민	"	16.3	23.6	20.0	2.0
	북한주민		7.7	17.2	12.5	1.3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2일) 참조.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력갱생의 명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9년 11월 4일) 참조.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남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이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 하지만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 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남한주민 11.5%, 북한주민 80.2%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2점, 북한주민의 경우 8.0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1.2점을 나타냈으며, 북한주민의 경우 전년대비 0.6점이 감소한 8.0점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북한주민에게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주민은 훨씬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온도차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6	1.1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	14.7	1.5
	북한주민	“ ”	44.0	4.4
2010	남한주민	“ ”	15.9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81.4	8.1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1	1.3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78.4	7.8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5	8.7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8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5.3	8.5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6	1.4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2	8.1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9.7	2.0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7.1	8.7
2016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0	8.1
2017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5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2	8.6
2018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1.5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0.2	8.0

2) 종합

□ 2018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6.4점으로 2017년 47점에 비하여 0.6점 하락하였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2점이 하락하였으며,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 역시 전년대비 0.4점 하락하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7

년까지 10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2017년 47→2018년 46.4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에서 보이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남 1.0 vs. 북 4.6),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남 2.8 vs. 북 9.4),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남 1.2 vs. 북 8.0)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남 9.0 vs. 북 7.1)와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남 2.0 vs. 북 1.3)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8/10	1.0/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1/10	3.9/10	5/20
	총점	17.6/45	23.3/45	40.9/90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1/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5/10	17.3/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8.1/10	9.7/20
	총점	17.8/45	30.1/45	47.9/90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0/10	13.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5/10	16.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8.9/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7/10	9.9/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0/10	12.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29.4/45	46.4/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4/10	17.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1/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1/10	9.5/20
	총점	17.6/45	31/45	48.6/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2/5	4.4/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6/10	9.0/10	13.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8/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10	0.9/10	2.5/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10	8.7/10	10.7/20
	총점	17.8/45	30.8/45	48.6/90
201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1/5	4.3/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9/10	9.2/10	12.1/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7/10	16.1/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0.4/10	2.4/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1/10	9.3/20
	총점	15.6/45	29.7/45	45.3/90
2017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5/5	4.1/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9.6/10	13.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7/10	7.1/10	15.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1.4/10	2.9/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6/10	10.1/20
	총점	17.2/45	30.8/45	48/90
20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5	4.6/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8/10	9.4/10	12.2/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0/10	7.1/10	16.1/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1.3/10	3.3/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0/10	9.2/10
	총점	16/45	30.4/45	46.4/90

3. 종합

- 2018년 남북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 41.2점, 정치영역 39.3점, 사회문화영역 46.4점을 합한 결과 총점 126.9점이다. 이 수치는 2017년의 121.6점에서 5.3점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이 각각 2.9점과 3.0점 상승하고 사회문화영역이 각각 0.6점 하락한 결과이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7→2009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4.2→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2015년 127.2→2016년 121.5→2017년 122.6점→2018년 126.9점으로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12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1.9→2009년 41.3→2010년 40.6→2011년 41.5→2012년 42.5→2013년 40.8→2014년 43.4→2015년 42.6→2016년 39.3→2017년 38.3점→2018년 41.2점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 기여도,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응답이 증가하면서 의식통합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북한주민의 경우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 의식통합 점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와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항목은 소폭 하락 하였다.

□ 다음으로,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점 → 2009년 39.8점 → 2010년 36.3점 → 2011년 35.9점 → 2012년 37.8점 → 2013년 36.8점 → 2014년 37.3점 → 2015년 36.0점 → 2016년 36.9점 → 2017년 36.3점 → 2018년 39.3점으로 변화했다. 정치제도 동질성이 소폭 하락하였고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등 모든 항목에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항목은 지난해와 같은 6.9점을 기록하였다. 정치영역 합계 의식통합지수는 지난해 대비 3.0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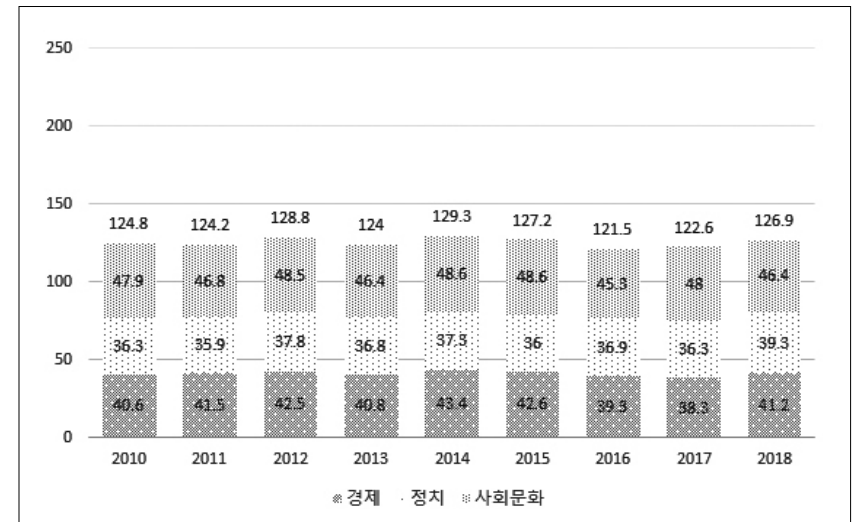
□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점 → 2017년 47.0점→2018년 46.4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항목에서 0.6점 상승하여 모든 항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그 외 항목에서는 소폭 하락 혹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영역 (80)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7	7.8	7.9	7.8	7.0	8.2	8.5	7.8	7.6	8.4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	6.0	5.6	5.9	5.4	5.5	5.8	4.7	5.3	6.3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9	2.5	2.2	2.4	2.4	3.3	3.3	3.4	3.7	4.2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	6.3	6.2	7.0	7.0	7.9	7.3	6.9	5.9	7.1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9	10.1	10.8	10.8	10.2	10.9	10.4	9.5	9.1	8.6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	7.9	8.8	8.6	8.5	7.6	7.3	7.0	6.7	6.6
소계		41.3	40.6	41.5	42.5	40.8	43.4	42.6	39.3	38.3	41.2

영역	변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치영역 (80)	통일의 필요성	15.3	15.5	14.8	15.0	15.5	15.4	14.5	15.1	14.9	15.3
	정치제도 동질성	0.7	1.3	1.0	0.9	1.8	1.2	1.4	1.1	1.1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9.5	6.9	6.7	8.5	7.0	7.7	7.3	8.1	7.3	9.7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8.2	6.2	6.7	6.9	6.1	6.3	5.8	5.9	6.1	6.4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1	6.4	6.2	6.5	6.4	6.7	7.0	6.7	6.9	6.9
소계		39.8	36.3	35.9	37.8	36.8	37.3	36.0	36.9	36.3	39.3
사회문화영역 (9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5.1	5.8	6.1	6.0	5.7	6.0	5.6	5.4	5.6	5.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8.8	8.8	13.1	12.9	12.2	13.3	13.6	12.1	13.6	12.2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8.0	17.3	16.8	17.6	16.4	17.0	16.2	16.1	15.8	16.1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	1.6	1.7	2.1	2.1	2.8	2.5	2.4	2.9	3.3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5.9	9.7	9.1	9.9	10.0	9.5	10.7	9.3	10.1	9.2
소계		39.4	47.9	46.8	48.5	46.4	48.6	48.6	45.3	48.0	46.4
합계	만점 250점	120.5	124.8	124.2	128.8	124	129.3	127.2	121.5	121.6	126.9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10~2018년 변화 추이



3장. 남북통합지수 : 2011~2018

- 2018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40.4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24.0%이다.
 - 2018년 남북통합지수는 2017년 175.2점에 비해 무려 65.2점이 상승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정치회담 등 남북관계가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였던 2018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통합률 역시 17.5%에서 24.0%로 6.5%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년대비 의식통합지수는 5.3점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구조통합지수는 59.9점 상승하여 종합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32점으로 전년대비 2.1점 상승한 반면, 관계적 통합지수 480점 만점 중 81.5점으로 전년대비 57.8점 상승하여 전체적인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59.9점이 상승했다. 또한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6.9점으로 전년 121.6점 대비 5.3점 상승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하락한 반면 정치,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상승하였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53.3점으로 전년대비 4.2점 상승하였고,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87.9점,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99.3점으로 전년대비 각각 42.8점, 18.3점 상승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총 57.8점 상승한 81.5점을 기록하였다.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 각각 1.2점, 37.6점, 19.0점 상승하였다. 특히 정치영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경제영역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7.6점을 기록한 반면, 정치영역은 2.2점 상승, 사회문화영역은 0.1점 하락하여 총 2.1점 상승한 32.0점을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은 0.6점 감소하였으나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이 각각 2.9점, 3.0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5.3점 상승하였다.

〈표 4-1〉 201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6/90	8.4	8.5/90	9.4	15.9/90	17.7	32/270	11.9
관계적 통합	4.5/160	2.8	40.1/160	25.1	37.0/160	23.1	81.5/480	17.0
의식의 통합	41.2/80	51.5	39.3/80	49.1	46.4/90	51.6	126.9/250	50.8
합계	53.3/330	16.1	87.9/330	26.6	99.3/340	29.2	240.5/1000	24.1

〈표 4-2〉 2017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6/90	8.4	6.3/90	7.0	16.0/90	17.8	29.9/270	11.1
관계적 통합	3.2/160	2.0	2.5/160	1.5	18.0/160	11.3	23.7/480	4.9
의식의 통합	38.3/80	47.9	36.3/80	45.4	48.0/90	53.3	122.6/250	49.0
합계	49.1/330	14.9	45.1/330	13.7	82.0/340	24.1	176.2/1000	17.9

〈표 4-3〉 2016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8/90	7.6	5.3/90	5.9	15.6/90	17.3	27.7/270	10.3
관계적 통합	5.3/160	3.3	3.9/160	2.4	18/160	11.2	27.2/480	5.7
의식의 통합	39.3/80	49.1	36.9/80	46.1	45.3/90	50.3	121.5/250	48.6
합계	51.4/330	15.6	46.1/330	14.0	78.9/340	23.2	176.4/1000	17.6

〈표 4-4〉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8/90	7.6	6.0/90	6.6	15.5/90	17.2	28.3/270	11.3
관계적 통합	20.1/160	11.8	7.3/160	4.6	20.4/160	12.8	47.8/480	10.0
의식의 통합	42.6/80	53.3	36.0/80	45.0	48.6/90	54.0	127.2/250	50.9
합계	69.5/330	21.1	49.3/330	14.9	84.5/340	24.8	203.3/1000	20.3

〈표 4-5〉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6.6/90	18.4	30.5/270	11.3
관계적 통합	18.7/160	11.8	6.8/160	4.3	21.0/160	13.1	46.5/480	9.7
의식의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6/90	54.0	129.3/250	51.7
합계	69.7/330	21.1	50.5/330	15.3	86.2/340	25.4	206.3/1000	20.6

〈표 4-6〉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4.8/90	16.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14.9/160	9.3	3.6/160	2.3	19.9/160	12.4	38.5/480	8.0
의식의 통합	40.8/80	51.0	36.8/80	46	46.4/90	51.6	124/250	49.6
합계	62.9/330	19.1	46.6/330	14.1	81.1/340	23.9	190.8/1000	19.1

〈표 4-7〉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4.0/90	15.6	27.1/270	10.0
관계적 통합	18.2/160	11.4	4.9/160	3.1	18.6/160	11.6	41.7/480	8.7
의식의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36.2	128.8/250	51.5
합계	67.3/330	20.4	49.2/330	14.9	81.1/340	23.8	197.6/1000	19.8

〈표 4-8〉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4.0/90	15.6	28.5/270	10.6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1/160	11.9	42.9/480	8.9
의식의 통합	41.5/80	51.9	35.9/80	44.3	46.8/90	52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7	79.9/340	23.5	195.6/1000	19.5

〈표 4-9〉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3.9/90	15.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	22.7/160	14.2	48.2/480	10
의식의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9/90	53.2	124.8/250	49.9
합계	69/330	20.9	47.9/330	14.5	84.5/340	24.9	201.4/1000	20.1

- 2011~2018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5년까지 200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16년에 170점대로 크게 하락한 뒤 2017년에도 큰 변화 없이 170점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240.4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 8년간 종합지수는 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8→2014년 206.3→2015년 203.3→2016년 176.4→2017년 176.2점→2018년→240.4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2014년 77.1→2015년 76.1→2016년 54.9→2017년 53.5점으로 2010년대 들어 계속 60~70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크게 하락하여 50점대로 떨어졌으나 2018년 113.5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하였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최근 8년간 27~30점 범위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올해 32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관계적 통합 수준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핵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크게 하락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반전으로 2018년에는 81.5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8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2015년 127.2→2016년 121.5→2017년 122.6점으로 120점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2018년의 의식통합지수는 한 반도 정세가 호전되며 126.9점으로 전년대비 5.3점 상승하였다.

□ 2011년~2018년의 남북한의 통합율을 보면 2015년까지는 20% 내외에서 소폭 변동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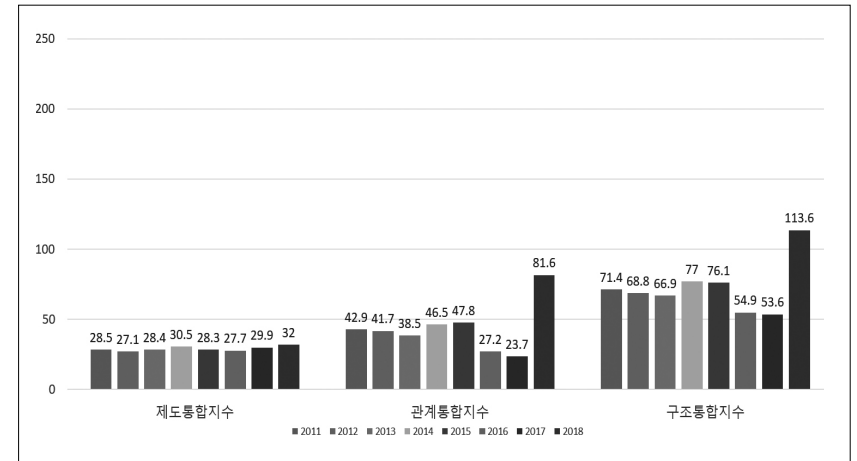
□ 8년간 남북 통합률은 2011년 19.5%→2012년 19.8%→2013년 19.1%→2014년 20.6%→2015년 20.3%→2016년 17.6%→2017년 17.6%→2018년 24.0%를 나타냈다.

○ 2018년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영역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정치 영역과 사회문화영역 또한 각각 13.4%, 5.4%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경우 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2014년 21.1%→2015년 21.1%→2016년 15.6%→2017년 14.9%→2018년 16.1%로 19~21%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15%~16%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치영역의 경우 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1%→2014년 15.3%→2015년 14.9%→2016년 14.0%→2017년 13.6%→2018년 26.6%로 2018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2014년 25.4%→2015년 24.8%→2016년 23.2%→2017년 23.8%→2018년 29.2%로 나타나 2018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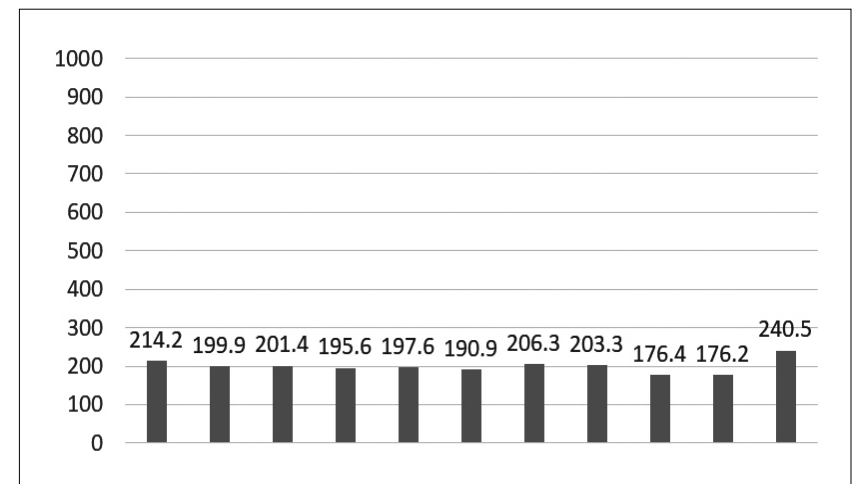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역별 통합률은 그 동안 사회문화>경제>정치 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정치영역 통합률의 가파른

증가로 정치영역이 경제영역보다 높은 통합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21.2%)>정치(19.4%)>경제(4.8%)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의식통합의 경우 사회문화(51.6%)>경제(51.5%)>정치(49.1%)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1~2018년 구조통합지수(제도통합+관계통합) 비교



〈그림 4-2〉 2011~2018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로 가장 낮고, 정치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은 3단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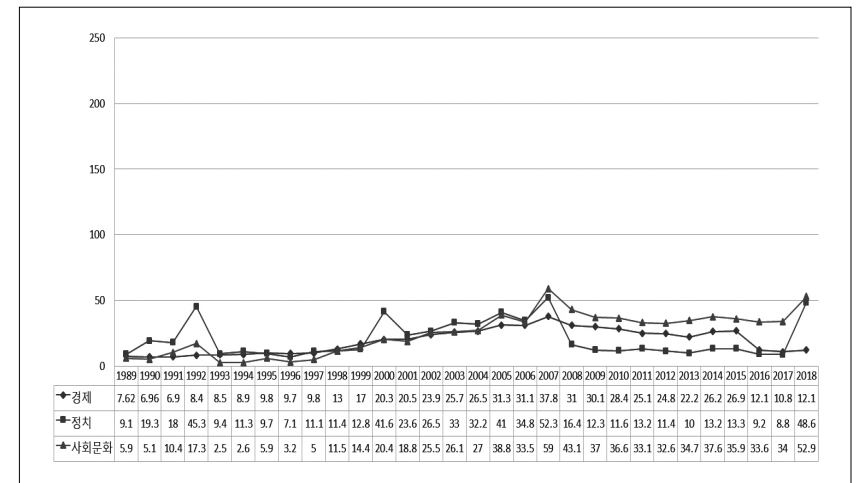
- 경제영역의 경우 역시, 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2015년 2단계→2016년 1단계→2017년 1단계로 →2018년 1단계로 3년 연속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정치영역의 경우, 2011년 1단계→2012년 1단계→2013년 0단계→2014년 1단계→2015년 1단계→2016년 0단계→2017년 0단계→2018년 3단계로 8년 중 가장 높은 통합단계를 기록하였다.
- 사회문화영역은 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2015년 2단계→2016년 2단계→2017년 2단계→2018년 3단계로 2010년대 들어 꾸준히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처음으로 3단계를 기록하였다.

〈표 4-10〉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89	1	6.62	7.6	0	1	8.1	9.1	0	1.1	4.8	5.9	0
1990	1	5.96	6.9	0	1	18.3	19.3	1	1.1	4	5.1	0
1991	1	5.9	6.9	0	1	17	18	1	1.1	9.3	10.4	0
1992	2	6.4	8.4	0	2	43.3	45.3	3	1.3	16	17.3	1
1993	2	6.5	8.5	0	2.5	6.9	9.4	0	1.5	1	2.5	0
1994	2	6.9	8.9	0	2.6	8.7	11.3	1	1.6	1	2.6	0
1995	2	7.8	9.8	0	3.1	6.6	9.7	0	1.9	4	5.9	0
1996	2	7.7	9.8	0	3.2	3.9	7.1	0	2.2	1	3.2	0
1997	2	7.8	9.8	0	3.3	7.8	11.1	1	3.2	1.8	5	0
1998	5	8	13.0	1	3.8	7.6	11.4	1	6.9	4.6	11.5	1
1999	5	12	17.0	1	4.3	8.5	12.8	1	7	7.4	14.4	1
2000	5	15.3	20.3	1	4.4	37.2	41.6	3	7.1	13.3	20.4	1
2001	5	15.5	20.4	1	4.5	19.1	23.6	2	7.2	11.6	18.8	1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2002	5.5	18.4	23.8	2	4.6	21.9	26.5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	2	7.4	18.7	26.1	2
2004	6	20.5	26.5	2	6	26.2	32.2	2	7.5	19.5	27	2
2005	6	25.3	31.3	3	6.1	34.9	41	3	8.4	30.4	38.8	2
2006	6.5	24.6	31.0	3	6.2	28.6	34.8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6	52.3	3	11.7	47.3	59	3
2008	8.3	22.7	31.1	3	6.3	10.1	16.4	1	12.6	30.5	43.1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4.2	22.8	37.0	2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3.9	22.7	36.6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4	19.1	33.1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4	18.6	32.6	2
2013	7.2	15	22.2	2	6.4	3.6	10	0	14.8	19.9	34.7	2
2014	7.5	18.7	26.2	2	6.4	6.8	13.2	1	16.6	21.0	37.6	2
2015	6.8	20.1	26.9	2	6.0	7.3	13.3	1	15.5	20.4	35.9	2
2016	6.8	5.3	12.1	1	5.3	3.9	9.2	0	15.6	18.0	33.6	2
2017	7.6	3.2	10.8	1	6.3	2.5	8.8	0	16.0	18.0	34.0	2
2018	7.6	4.5	12.1	1	8.5	40.1	48.6	3	15.9	37.0	52.9	3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9

2019 남북통합지수

- 발행일** 2020. 2. 28
-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발행인** 임경훈
- 책임연구원**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공동연구원**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조연구원** 이종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황창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 등록** 119-82-67975(2006.7.7)
-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880-4052-4
- 팩스** 02-874-7305
-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ISBN 979-11-966513-3-6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